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대한민국 정권 교체에 따른 남한 대북

언론보도의 변화

-2003~2012년 중심으로-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크세니아 바흐티아로바

국제학 석사학위논문

대한민국 정권 교체에 따른 남한 대북

언론보도의 변화

-2003~2012년 중심으로-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크세니아 바흐티아로바

**The Change of the South Korean News
Reports on DPRK in relation to ROK's
Government Shift**

-with focus on 2003~2012-

A thesis presented by

Ksenia Bakhtiarova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17

<국문초록>

대한민국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 대북 언론 보도의 변화

-2003~2012년 중심으로-

크세니아 바흐티아로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본 연구는 『중앙일보』 및 『서울신문』의 대북 보도를 분석하면서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권 시기에 나타난 북한 이미지의 변동을 살핀다. 노무현 정권 및 이명박 정권이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을 가지면서 다른 대북 정책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각 정권과 대한민국 미디어 간의 관계가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가 언론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북관계라는 주제에서 그렇다. 한편,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성 및 남북관계에 대한 대중의 의식 형성 과정에서 절대적 역할을 한다. 두 시기의 대북 신문

보도를 내용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연구하여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종합적 이미지와 그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2012년 사이에 실린 대북 보도는 대부분 중립적인 논조를 가진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이명박 정권 시기보다 긍정적인 논조를 표명한 보도가 더 많았다. 반면, 이명박 정권 시기에 북한에 대해 부정적 논조를 표명했던 기사의 비율이 늘었다. 둘째, 대북 보도는 주제와 대북정책 논의부터 정보원 활용까지 시기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가 가장 ‘핫 이슈’로 나타났으며, 남북회담, 내부 사정, 인권, 미사일 발사/교전/훈련, 경제적 문제, 6자회담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았다.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권 시기에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보도가 이명박 정권 시기보다 더 많았다. 반면, 이명박 정권 시기에 실린 보도 중 미사일 발사/교전/훈련, 북한의 경제적 문제와 내부 사정에 관한 보도가 더 흔했다. 대북 정책 영역에서 대책 마련이나 다자합의와 같은 중립적 정책에 대한 제안이 우세했지만, 2003~2007년 사이에 신문사가 남북간의 협력을 바라는 보도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2008~2012년에 안보 태세 강화하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보원 활용 측면에서는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이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한 정치권 및 교수, 연구기관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 시기에 상관없이 우세했는데 북한의 당국자를 인용하는 것이 제일 드물었다.

2003~2007년에 『서울신문』은 탈북자의 증언 및 소문을 더 많이 활용한 반면, 『중앙일보』는 '북한 언론사'를 더 많이 인용했다. 다만, 2008~2012년에 북한 언론사 활용이 증가했다. 그리고 2008~2012년에 '소식통'과 같은 익명 정보원을 더 많이 인용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대립자', '군사적 위협', '협력자', '독재국가' 및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었다. 즉 북측과 협의하는 것이 어렵고,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고 모든 협력의 노력을 파괴한다는 표상이 우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협력자'라는 프레임이 주로 2003~2007년에 나타나는데 그때의 정상회담 등 사업이 이끌었던 남북 협의에 대한 기대를 표시한다. 다만 2008년 이후 '독재국가'와 '개혁·개방의 대상'과 같이 '저개발국' 및 '군사적 위협'이라는 프레임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 때에 북한 정권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주민들의 인권 및 복지보다 군사적 개발을 우선하는 것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더군다나, 2003~2007년 신문사들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북측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잘못으로 구성했다. 반면, 2008년 이후 회의 취소나 사업 중단 경우에는 북한이 유일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주요어: 프레임, 이미지, 내용분석, 북한, 뉴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5
제 2 장	연구목적, 대상 및 방법	18
제 1 절	연구목적과 대상	18
제 2 절	연구 방법	22
제 3 절	연구의 한계	34
제 3 장	양적 분석과 프레임 분석 결과의 해석	35
제 1 절	양적 분석	35
제 2 절	프레임 분석 연구 결과	53
제 4 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66
<참고 문헌>	72
<부록>	76
<Abstract>	86

표 목차

<표 1> 대북 보도의 논조, 2003~2007 (%)	38
<표 2> 대북 보도의 논조, 2008~2012 (%)	38
<표 3> 대북 보도주제, 연도별. 건(%).....	44
<표 4> 대북정책 제의, 연도별. 건 (%)	46
<표 5> 북한의 역할, 연도별. 건 (%).....	48
<표 6> 정보원 활용, 2003-2007. 건 (%).....	51
<표 7> 정보원 활용, 2008-2012. 건 (%)	52
<표 8> 보도 행위자의 현저성. 건 (%)	76

그림 목차

<그림 1> 대북 언론보도의 긍정적 논조, %.....	
<그림 2> 대북 언론보도의 부정적 논조, %.....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북한에 대한 뉴스가 한국에서 매일 나온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서 대중매체가 거의 유일한 정보 차원이 된다. 이 상황에서 대북 언론이 해당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면서 수용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뉴스가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면서도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가 특정 사건과 해석 방식을 골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각 언론사가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변수로 인해 보도 대상 선택(agenda-setting)과 보도 방식(frame)을 결정한다. 따라서, 언론이 제공하고 있는 정치인 이미지, 국가 이미지도 같은 변수로 인해 형성된다. 한국에서의 높은 신문/인터넷 구독률을 고려하면 (The Science Times 2008, ICT 통계센터 2013), 신문으로 퍼지는 정보가 넓게 알리고 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 제작자들은 이슈의 현저성 (salience)을 유지하기 위해 그 이슈의 특정한 측면을 끊임없이 방법 다르게 강조한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구성된 북한 체제 교체에 따른 보도 프레임으로 인해 북한 문제 구성 변화, 또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 (이완수·배정근, 2013). 김일성과 김정일 사망 후 신문 보도는 전체적으로는 안보강화와 군사대결적

프레임이 지배적이었고 대북정책에 대한 보도에서는 군사안보와 외교동맹이 주요 프레임이며 한국 정부와 사회단체의 발언에 대한 보도에서는 남남갈등이 중심 프레임으로 언급된다. 다만, 김정일 사망 시기에 군사대결 프레임 사용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 대신 평화촉진 프레임, 경제불안 프레임이 등장했으며 조문문제에서는 유화 프레임이나 중립 프레임이 주도적이다 (이완수·배정근, 2013).

남북관계는 남한의 외교정책 틀 중 하나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변수이다 (Shin Gi-Wook and Burke 2008). 따라서, 북한의 표상은 남북관계에 미치는 것과 같이 남한의 정체성 또는 그 정체성에 대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의제 설정 이론과 양적 내용분석으로 인해 남북관계와 관련된 지배적 의제를 밝혔고, 그 중에서는 '통일·평화', '동양 안보', '인도적 문제와 인권'이 제일 두드러진 주제로 보인다. 정치·안보 관련된 주제가 경제적 문제보다 일반적으로 더 자주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과 사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결국 안보에 대한 걱정이 경제적 협력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이미지 형성의 주관성과 뉴스 프레임 구성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인' 뉴스가 특정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구나,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뉴스는 수용자의 신뢰성을 더 잘 얻어낼 수 있어서 '객관성' 자체가 프레임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뉴스 프레이밍 과정을 프레임 구성(frame-building) 보다 프레임 설정(frame-setting)으로 나눌 수 있다 (Vreese, 2005). 프레임 구성은 프레임 조작을 의미하는데 설정은 프레임이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한다. 이 영역에서는 대북 언론 프레이밍은 어느 정도로 대중의 대북 인식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수용자가 대북 뉴스에 대해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정영철 외 2013), 대체적으로 대북 언론보도가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성준·이창현 2002).

요약하자면, 한국 언론 관련 변수들은 사회학적 특성과 정치이념 성격이 개인차 변수들과 결합해서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미디어부터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경희·노기영, 2011).

다른 고려할 만한 변수는 한국 미디어의 정파성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보수’ 갈등이 여전히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기도 한다. (김경희·노기영 2011, 김도윤·김성해·유용민 2013, 조화순·박율민 2015).

진보적 지향성이 강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이러한 갈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경희, 노기영, 2011). 특히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던 것은 언론사의 이념적 논쟁에 또 다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진 미국

최고기 수입에 대한 토론은 대한민국 신문사를 보수지나 진보지로 더욱 분할시킨 계기였으며, 이에 따라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보수지와 진보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확대됐다. 결국엔 언론도 북한체제를 적대적으로 보는 매체와 온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로 대립해 왔고, 한국 대중매체의 정치적 성향은 북한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규정해 왔다 (김경희, 노기영, 2011). 즉 대한민국 미디어 조직의 이념적 특성이 결국 북한사회에 대한 기자들의 보도방식 및 대북 뉴스 프레이밍에 반영된다.

프레임과 이미지가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엔트만 1993, 쿤치크 1996, 쉐펠 1999). 따라서, 북한 문제 프레이밍 북한 이미지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03~2012년 시기의 보도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발견하고자 한다. 2003~2012년 사이에 대북 보도 변화의 변수가 많은데 그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정권교체다. 대부분 연구들은 진보지와 보수지만 주목했으나 극단적 정치적 성향을 보이지 않은 신문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 따라서, 또 다른 한국 신문의 프레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한국신문의 ‘진보’와 ‘보수’ 정파성 문제보다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를 집중할 예정이다.

뉴스 보도가 정치적 성향뿐만 아니라,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박성태, 2011). 정권 교체가 언론사의 정파성과 나란히 공공이슈에 대한

보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파성만 문제점으로 삼고 현재 정권의 영향을 간과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프레임 구성 (frame-building)으로 인해 제작했던 북한의 이미지와 그 시기적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것을 위해 먼저 기존 연구와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 본 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연구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해석할 예정이다.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1) 뉴스 프레임에 대한 이해

프레임은 현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가운데에서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고 부각시키게 된다. 단순한 사실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나, 그 사실은 정보 프로세싱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프레임은 바로 그 사실을 의미있게 만드는 주요 아이디어로 인식된다 (Gamson, 1989). 따라서, 뉴스프레임은 원래 의미 없거나 잘 모르는 상황이나 주체의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그 결과 프레임 이내에 언급된 상황 및 문제의 현저성 (salience)을 가지게 된다.

갠슨과 모디글리아니(1989)는 ‘해석 패키지’ (interpretation package)라는 개념을 소개했고 프레임을 이 ‘해석 패키지’의 단위로

제시하였다. 해석 패키지는 특정 사회적 문제를 나타내는 모든 상징적 프레이밍 수단을 포함하며, 프레이밍 수단은 총 5 가지가 있다: 은유, 실례, 표어, 묘사 및 시각 심상 등이다 (Gamson & Modigliani, 1989). 각 문제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쟁적 해석 패키지가 있으며 각 패키지의 중요성이 상황 및 시간에 따라 변화된다.

중요한 점은, 사회이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은 시간의 흐름과 조건 변경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것이다 (Scheufele, 1999; Entman 1993). 프레이밍의 잠재가 주로 소통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소통은 동적인 과정인데 프레임의 생기는 과정 (프레임 구성, frame-building) 및 미디어와 수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프레임 설정, frame-setting)을 포함한다 (Vreese 2005).

쉐펠 (1999)에 따르면, 프레이밍 연구에 대한 관점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종속변수로서의 미디어프레임과 독립변수로서의 미디어프레임, 종속변수로서의 수용자프레임과 독립변수로서의 수용자프레임이다. 쉐펠은 기존 연구를 요약하면서 기자가 문제의 프레이밍을 조작하는 과정에 최소 5 가지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회의 가치, 조직적 한계, 이익 집단의 압력, 신문 특유의 루틴 및 기자의 정치적 성향이 그것이다 (Scheufele, 1999). 이익 집단의 압력에 관련해서, 그러한 집단들이 대중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같이 자기 사회적 영향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운

프레임을 조작하게 되는 경우에 중요하다. 기자가 인간으로서 프레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Scheufele 1999).

지틀린(2003)은 미국의 학생운동의 예를 통해 뉴스 프레임 과정을 살펴봤다. 기틀에 따라, 뉴스 미디어는 복잡한 사회적 단체이며, 뉴스가 의미 있는 사건을 규정짓기 위해 사회의 지배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기계적 순서와 규칙을 지키게 된다. 결국에 해당 미디어가 사건을 분석하거나 보도하는 프레임이 생긴다. 대중매체는 사건을 해석하는 중개업으로서 문제를 반영하기보다 문제를 제작하는 것이다 (Gitlin 2003).

뉴스 프레임 과정도 국가나 엘리트 개입과 같은 외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있다. Chomsky 는 미국의 대중매체를 주목하여 소위 민주주의적 사회에서도 권력이 있는 선전자들은 대중매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매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선전모델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촘스키의 선전모델은 5 가지 필터(소유권, 광고주, 뉴스의 정보원, 플렉 및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모델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의 대중매체는 정치인과 사업가들의 영향과 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민족주의 사회의 엘리트들은 자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선전을 진행하는데 촘스키는 이 현상을 조작된 동의 (manufactured consent)라고 했다 (Herman&Chomsky 1991). 선전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모델은 넓게 인정되는 모델이 되어서 대부분 민주주의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뉴스 프레임 (news frame) 연구들은 주로 뉴스 기사나 영상을 특정 관점에 따라 구성하는 하나의 틀로서 프레임을 인식한다. 오늘날 뉴스의 보급력을 고려한다면, 뉴스 프레임이 정책, 공공의견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같은 연구는 뉴스가 자주 노출되면 시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증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다만, 정영철·류석진 등(2013)이 지적했듯이, 프레임의 중요성을 절대화하면서 정보사회의 수용자의 역할을 과소할 우려가 있다. 수용자는 정보를 받을 때에 다른 정보원도 수용하며 자기 네트워크 이내에 다른 수용자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최진봉(2009)은 남한의 대북보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보도를 분석하고 비교해 봤다. 최진봉은 민족지학적 내용분석, 프레이밍 분석 또는 비교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그에 따라, 미국 언론은 북한에 대해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프레임만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신문사는 긍정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언론의 경우에는, 『조선일보』는 일반적으로 『한겨레』 신문보다 북한을 더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남한 언론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긍정적 프레임은 통일 문제와 연결되고, 여기서 ‘한민족’이라는 일단(cluster)이 제일 대표적이다. 반면 부정적인 프레임은 ‘적’, ‘테러 국가’

및 ‘악마’라는 일단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나란히 북한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즉 『한겨레』와 조선일보는 북한 정권과 북한 민족에 대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작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가 한계가 없지 않다. 첫째,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한국 측에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를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의 『한겨레』신문 및 조선신보는 극좌/극우파를 대표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러한 연구는 2001~2002 년의 짧은 시기를 살펴봤던 것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뉴스와 정보는 실제 현실을 재구성하여 특정한 틀을 부각시켜서 사건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며 고정관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다른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과장되거나 단순화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해당 국가나 상황에 대해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완수·배정근 2013, 정영철·류석진 등 2013).

여러 연구들은 (Saleem 2007, Choi 2009) 국가 이미지를 밝히기 위해 내용분석과 나란히 프레임 이론 및 프레임 분석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프레임과 국가 이미지가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국가의 이미지란 개념의 의미

본 연구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미지’라는 개념이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넓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만, ‘이미지’의 개념이 단순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분석을 이용하고 있는 ‘이미지’ 혹은 ‘표상’의 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북한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지만, 북한 문제 프레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 연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국내외방송과 신문의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해 보도의 양과 감상을 들어낸다.

대중매체는 프레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큰 영향을 주며, 이미지가 프레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미지는 어떠한 대상, 인물, 나라 등에 대해서 한 인간 정신 속에 존재하고 있는 포괄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Saleem 2007).

이미지의 개념이 1950 년대의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고, 주체의 ‘분위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볼딩(1959)은 인간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위가 ‘객관적’인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Boulding 1959).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가 우리 행동을 결정한다. 한 국가의 ‘적대적 성향’도 현실적인 성향보다 우리가 그 국가에 대해서 예상해 왔던 이미지다.

중요한 점은, 국가의 이미지가 보통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장기적 개념이다. 즉 이미지가 역사 속에서 뿌리를 두고 미래까지 연장될 수 있다 (Boulding 1959). 하지만, 그 이미지는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정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라 바뀌고 재형성된다 (Choi 2009).

또한, 볼딩은 국가의 이미지가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권력이 있는 지도적 집단에 대한 이미지이며,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인에 대한 이미지다 (Boulding 1959). 국가가 민주주의에 가까울수록 그 국가의 일반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쿤치크(1997)는 소위 ‘민족적 성향’이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없으나 연구자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모색하면서 고정 관념을 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성격이 없더라도 국가나 민족의 이미지와 고정 관념이 존재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고정 관념은 정보의 부족을 보충하며 행동의 정위가 된다. 이미지와 고정관념이 서로 비슷한 개념인데 이미지가 주체로써 조작했던 것이며, 고정관념이 환경에서 생기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국가 이미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단단해진 선입견이다 (Kunczik 1997). 대중매체도 국제적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 사건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특정한 이미지에 의지하는데 결국에 사건에 대한 메시지가 현실에서 달라진다.

최진봉은 현대 사회를 ‘이미지의 시대’라고 제시하면서 이미지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이미지는 긴 기간 동안 정보의 작은 조각들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직접적 정보 얻기가 어려워 이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정치인이나 단체의 발언 또는 대중매체로써 제작된다 (Choi, 2010). 최진봉은 미국 뉴스 또는 한국 뉴스를 중심으로 북한의 이미지 프레이밍을 분석해 봤다. 분석 결과로, 미국 뉴스에서 ‘악의 축’이라는 프레임은 역시 지배적 프레임이며, 2001~2002년에 뉴욕 타임스 및 워싱턴 포스트가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 프레임을 사용한 적도 없다 (Choi 2010).

대중매체는 이미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세계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세계에서 모든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정보를 다른 자원에서 얻을 수밖에 없고 대중매체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대중매체가 특정 사건이나 주제를 선택하고 보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보도 방식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제작된다. 따라서, 보도에서 인물이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3)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의 특징

본 연구는 2003~2012년 걸친 시기를 대상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정권교체가 남북한관계 물론, 남남갈등 또는 남한 언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2003~2012년의 정치적 상황을 요약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대중매체와 정부 및 엘리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언론이 특별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이내에 발달되어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며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취임해서 햇볕 정책을 유지했는데 2008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해서 ABR 정책을 실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새 대북정책을 세웠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의 대북 정책을 인수했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그 결과로 2007 남북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다만 2006년의 북한 핵실험과 같은 남북 갈등 때문에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안정식(2002)은 북한 정권의 변화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햇볕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남북갈등이 없지 않았다. 그 중에서 북한의 NPT 재탈퇴, 1차 핵실험, 남북 열차 실험 운행 실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명박 취임한 후 언론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이 상당히 바뀌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실패로 인식하면서 남한의 안보와 북한의 정치적 체제를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비핵·개방·300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즉 북한의 핵 포기 및 다른 국가들에게 개방 및 북한 주민의 월급이 3천 달러에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결국에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된다는 비판도 있는데 (엄상윤 2008, 이창현 2013),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사건 침몰 사건 및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고려하면 이 비판이 무의미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 때문에 불가피한 옵션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임수호 2010).

물론, 언론도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진규(2012)는 6 개 정치권력의 변동과 이에 대한 7 개일간지의 보도 경향을 분석해 봤다. 연구에 따라,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제일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서울신문과 중앙신문도 노무현 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해당 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이 거의 없었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를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한겨레』 신문이 제일 많이 비난했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중간에 있는데 서울신문은 중앙일보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한국 신문의 정파성을 재확인하고 해당 언론사와 정권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보여 준다.

한국 미디어는 국가정책을 통제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장집 2005), 미디어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이성로(2010)는 미디어 영역에서 지배적 계급의 역할을 강조했고 신문, 인터넷 뉴스 등 대중매체가 권력이 있는 보수파의 언론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성로(2010)는 전부 지배적 계급을 경제적 지배계급, 정치적 지배계급, 언론 지배계급 및 관료계급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눴고, 종류간에 존재하고 있는 연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시기에 경제적 엘리트와 정치적 엘리트들이 거리와 더 중첩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눈에 뜨인다. 예를 들어서, 언론 엘리트는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를 담고 있고, 그런 신문사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 엘리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엘리트들은 대중매체를 헤르만과 촘스키(1993)가 주장했던 언론 통제 수단 중 소유권 및 광고를 사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미디어도 지배적 계급의 인식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한국의 언론사를 살펴봤던 김주언(2008)이 지적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언론기관과 큰 방송사에 자신의 측근을 심었고 이에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해임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

다시 말하자면, 남한사회와 북한의 정권 교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이념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보수’ 이념적 갈등이 여전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지향성이 강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이러한 갈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다

(김경희·노기영 2011). 특히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과 언론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던 것은 언론사의 이념적 논쟁에 또 다른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정권 시절에 벌어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토론은 대한민국 신문사를 보수지나 진보지로 뚜렷하게 분할시킨 계기이었으며, 이에 따라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보수지와 진보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욱 확대됐다. 언론도 북한체제를 적대적으로 보는 매체와 온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로 분열된다. 즉 한국 대중매체의 정치적 성향은 북한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규정한다 (김경희·노기영 2011). 즉 북한에 대한 미디어 조직의 이념적 특성이 결국 북한사회에 대한 기자들의 보도방식에서 반영된다.

한국 뉴스의 또 다른 문제는 신뢰성이다. 김동윤·김성해(2012)는 한국신문의 한계를 분석해 봤다. 한국 언론은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한국 뉴스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원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문이 실명 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익명 정보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국내 언론사들은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한국 언론사들은 정치적 혹은 경제적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원 보호 수단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박재양·안수찬·박성호 (2014)도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한국 신문의 신뢰성 수준을 비판했고, 엘리트 정보원을 직접 인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요약하자면, 한국 신문의 특징 중에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보인다. 첫째는, 신문과 권력 집단 간의 관계다. 신문이 특정 권력 집단의 언론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신문의 정치적 성향과 보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한국신문의 정파성이며 그 정파성에 따른 보도 왜곡이다. 특히 정권 교체 상황에서 심화되는 남남 갈등이 남북관계나 대북정책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보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한국신문사의 신뢰성이다. 기존 연구에 따라, 한국 언론사들은 익명 정보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제 2 장 연구목적, 대상 및 방법

제 1 절 연구목적과 대상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들어난 문제점들을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 또는 프레임 분석을 통해 다룰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3~2012 년에 한국에서 나온 대북 보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한국 언론사의 특수성, 프레임의 방식 또는 미디어 내용분석의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2003~2012 년 걸친 시기를 연별로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도가 변화된 시점을 밝힐 전망이다. 한편, 질적 내용 분석과 프레임 분석사용은 대북 보도태도가 변화된 시점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프레임을 요약하면서 북한의 종합적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겠다.

본 연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연구 문제 1> 2003~2012 년 시기 동안 대북 보도의 논조, 주제, 정보원 활용 패턴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연구 문제 2>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대북 보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레임을 사용했습니까?

<연구 문제 3> 노무현 정권 시기 및 이명박 정권 시기에 프레임으로써 제작된 북한의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유사하며 차이를 보입니까?

2) 연구의 대상

앞서 봤듯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으로 언론사의 정파성을 기준으로 삼았고, 분명 좌익 및 우익 신문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서 주로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파성을 덜 드러내거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이지 않은 신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이러한 신문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와 미디어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밝힐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의 정파성보다 북한의 전체적 표상을 밝히는 것이라서 이러한 신문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1904 년에 설립되었던 『대한매일신문』에 뿌리를 두며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신문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 때에 결국 항일운동의 선봉에 선 『대한매일신보』는 한일 합병되던 1910 년에 종간되었는데 해방 직후 『대한매일신문』의 지령을 계승하면서

‘해방조선의 대변기관’을 자임한 『서울신문』으로 회복했다. ("서울신문안내" 2017). 서울신문은 해방 직후까지 계속 조선 최대신문사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해방직후 ‘좌파 언론사’로 된 적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중간파 언론사로 인식된다. 서울신문 기사를 분석했던 연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러한 연구들 역시 서울신문을 ‘중도파 신문사’로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김동선 2014, 김동윤 2015).

한편, 중앙일보는 1963 년에 창간되었고, 그 때부터 커다란 언론기업이 되었다. 이 언론사는 사적 자본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까지 삼성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가 경제적 엘리트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했고 오랫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나란히 보수지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요즘 중앙일보가 이러한 낙인을 없애도록 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비해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중앙일보가 조·중·동 집단 내에 보수언론사로 제시된 적도 있는데 (김영욱, 2011; 임양준, 2011; 김동윤, 김성해, 유용민, 2013) 보수 언론에서 제외시키는 연구들도 있다 (이완수·손영준, 2011; 정영철·류석진 등, 2013). 따라서,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샘플링 방법

위에 언급했듯이, 연구의 분석 시기는 서로 다른 대북정책으로 이루어졌던 노무현 및 이명박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기사를 2003 년부터 2012 년까지 시기 이내에 연도별로 검색해 봤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별 신문 기사의 지면이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사안 등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두었다. 다만, 실제 내용은 북한과 연관이 약하면 대북 프레임 또는 북한의 이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이나 ‘북’이라는 단어를 두 문장 내에서 언급한 경우와 사진기사의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서울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카인즈 신문 데이터베이스 (bigkinds.or.kr)를 사용했는데, 『중앙일보』의 기사 검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앙일보』 홈페이지 내 검색 도구를 활용했고, 검색 원칙은 동일했다.

분석 시기에 맞춰 기본 단어로 ‘북’, 본문에 반듯이 들어가는 단어로 ‘북한’을 기준으로 하여 기사를 검색했다. 검색한 결과, 『서울신문』 7060 건, 『중앙일보』 총 22868 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큰 규모의 기사를 질적으로 분석하기가 불가능해서, 선택적인 분석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먼저 비 (非)비례적 층화추출 샘플링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은 샘플을 종류별로 나눠서 각 종류의 특정 횟수의 샘플을 골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뉴스와 같은 차원을 종류별 또는 시기별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각 종류 혹은 시기의 기사

몇 개가 분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각 종류 내에 기사의 횟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며, 그것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지만, 시기별 보도를 분석할 때에 비례를 유지하기가 의무적이지 않다 (Neuendorf 2002). 예를 들어서, 브린(1997)은 뉴스 보도를 분석했을 때에 종류 비례와 무관하게 각 시기에서 보도 100 개를 사용했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양적 내용분석, 질적 내용 분석 또는 프레임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전에 최진봉(2009)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뉴스와 한국 뉴스에서 반영된 북한의 이미지를 분석했으며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하승희·이민규(2012)도 프레임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도를 살펴 봤다.

프레임 분석도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1-단계분석과 2-단계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프레임 분석 방법 선택은 연구 문제 및 목적, 다른 방법 사용 여부 등에 의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분석과 같이 양적 또는 질적 내용 분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1-단계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1) 논조 분석

기사의 논조를 밝히는 것은 내용 분석과 프레임 분석 과정의 기본적인 틀이다. 프레임 분석이나 내용 분석 영역에서 기사의 논조를

3 등급 (김영희 2005, 최종환·하진홍 2016)이나 5 등급으로 분류한다 (Choi 2009).

논조 분석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한 뒤 기사의 전체적 논조 분석이 가능하다 (김영희 2007, 이화행 외 2014). 반면, 최진봉(2009)은 먼저 기사의 논조를 발견한 뒤 논조에 근거하여 대체적인 프레임 (긍정, 부정, 중립)을 도출했으며 그 다음에 질적 보도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논조는 프레임 분석의 첫 단계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한 보도를 분석했던 최종환·하진홍(2016)은 ‘논조’라는 개념을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신문사의 인식’이라고 제시하였고, 기사를 논조에 따라 3 가지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최종환과 하진홍이 북한에 대한 논조뿐만 아니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논조를 분석해 봤는데 이는 남북관계의 특정 틀에 대한 보도를 연구할 때에 의미가 있다.

한국 보도에서 나타나는 북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신문 보도의 논조를 분석해 봤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논조를 ‘긍정’, ‘중립적·혼합’, ‘부정’ 종류로 분류했다. 북한의 정치권이나 주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가 우세하는 경우에 ‘긍정’으로 분류했다. 반면 북한의 빈곤을, 내부적 이슈를 부각시키거나 북한을 독재국가, 비정상적인 국가를 제시하는 경우에 ‘부정’으로 코딩했다.

마지막으로는, 기사의 지향성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거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혼성되면 해당 기사를 ‘중립·혼합’으로 분류했다. 논조를 파악하기 위해 기사의 제목, 중심 내용 앞 문장과 끝 문장을 고려했다.

논조 분석을 중심으로 코더 2 명이 신문 기사 코딩작업을 실행했고 코더간 신뢰도를 확인했다. 코더 신뢰도 검증을 위해 전체기사 중 5%을 선정해서 사전에 측정했다. 신뢰도 계수는 Scott's pi 값을 통해 도출했으며 코더간 신뢰도는 Scott's pi= 0.86 이었다.

2) 내용분석

내용분석은 체계적이고 저자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텍스트, 영상, 기호 등 해석을 의미한다 (Krippendorf 2013). 내용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나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진봉 (2009)은 양적 분석을 ‘전통적 내용분석’으로 제시하며 질적 내용분석을 프레임 분석을 위해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부분적인 기사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한 뒤, 북한의 이미지 프레이밍을 밝히기 위해 질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양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Nvivo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종합적 내용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실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사용되지 않다. 반면, Nvivo 와 같은 프로그램은 단어 혹은 카테고리 검색, 양적 분석 등 객관적인 작업을 하는데 연구자가

질적 분석과 정서분석을 해야 한다. 즉, 내용분석은 연구자와 프로그램의 합치적인 작업이 되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인다 (Krippendorf 2013).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기사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묶고 코딩했다. 내용분석을 하기 전에 1 차적으로 사전조사를 통해 분석 자료에서 2 번이상 나타난 패턴이나 주장을 종합해 일반 명제로 확립하는 귀납적 방법을 활용해 유목을 도출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의 내용은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뉴스의 특성 때문이다(김성해 2010). 즉, 이러한 방법은 카테고리를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문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실제로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석유목은 『서울신문』과 『중앙일보』 뉴스 특수성과 패턴을 고려하여 선정된 3 개의 연구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한 기사 내에 여러 가지 주제, 행위 및 의견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기사 주제, 행위자 등 요소의 변화에 따라 분석 유목이 달라진다. 정일권·김예란(2010)은 이러한 뉴스 기사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시퀀스’를 분석단위로 삼았고 보다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었다. 즉, 뉴스 기사 이내에 나타나는 주제나 프레임 일관성에 따른 코딩으로 인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각 단락이나 문장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 북한의 역할, 대북 정책 제의, 정보원 등의 다섯 개의 유목을 간추렸다.

A. 주제와 사건: 기사의 해당 부분의 핵심 내용이나 다루고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 아래와 같이 10 개의 유목으로 분류했고 코딩했다.

A1. 6 자회담: 6 자 회담 개최, 폐쇄, 결과. 혹은 6 자 필요성에 대한 언급

A2. 북핵: 북한에서의 핵개발, 핵실험, 핵포기, NPT

A3. 공동 행사·사업: 남북 공동 문화적, 인도적 행사나 사업 개최

A4. 남북·역류: 납치나 북한 이내에 외국인 역류 사건

A5. 법적 문제: 법·결의 통과, 협상 재택

A6. 행사·사업 중단: 개성공단 일부 사업 중단, 열차 운행 취소, 이산가족 상봉의 취소

A6. 제재 실시: 유엔 등 국제기구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

A7. 탈북·귀순: 대량 탈북 사건, 귀순 사건

A8. 통일: 통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

A9. 인권: 북한의 인권 탄압, 식량난 또는 탈북자에 대한 언급

A10. 내부 사정: 당국자의 타계, 선거, 전염병이나 자연적 재난

A11. 기타: 위의 유목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

B. 북한의 역할: 해당 기사 맥락 내에 북한의 행동과 북한을 둘러싼 논의를 가리킨다. 아래와 같이 9 개의 유목으로 코딩했다.

B1. 군사적 위협: 군사적 도발,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

B2. 대립자: 고립을 보이는 행동

- B3. 독재국가: 인권 탄압, 체제 강화, 선전선동, 수송 제한
- B4. 협력자: 공동행사 제안, 성공적 회담, 공동행사 개최
- B5. 원조의 대상: 지원 요청 또는 지원 수락
- B5. 예측 불가능한 나라: 갑작스럽고 분명한 원인이 없는 행동
- B6. 실패국가: 경제적 문제, 식량 부족, 일반인의 논란 등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
- B7. 국제법 위반자: 유엔 결의안이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동
- B8. 피해자: 자연적 재앙이나 전염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
- B9. 불투명: 해당 맥락 이내에 북한의 역할과 북한에 대한 견해가 명확하지 않음

C. 대북 정책 제의

미래의 대북정책에 관련된 저자의 견해 및 권고를 의미하며 사실이나 칼럼에서 자주 나타난다. 남한 정치권에 건의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유목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건의를 ‘반항’, ‘중립’, ‘협력’ 등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한 다음 9 개의 유목으로다.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분석 때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C1. 반항

a) 전투 태세: 경계 태세 강화, 무기 발전, 훈련, 군사적 동맹, 도발 경우
긴급적 대응

b) 제재: 금융 제재, 원조 중단

C2. 중립

a) 대책 마련: 북한의 도발이나 대해 새 대책 마련

b) 다자간 합의: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 제외 관련 국가와 공동정책
수립

C3. 협력

a) 회의·대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북한측에 직접적 접촉

b) 인도적 협력: 식량·쌀 지원, 이산가족 상봉

c) 공동 행사·사업: 개선공단 발전, 관광 프로젝트 투자, 에너지 지원

d) 협력 기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이
제시되지 않음

C4. 기타: 정책의 전환에 대한 제안이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 않음

D. 정보원: 기사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출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원을 아래의 9개의 종류로 분류했으며 코딩했다. 다만, 한 항목은
다시 여러 가지 부목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D1. 교수·연구원: 대학 교수, 연구원 및 연구소 등 전문적 의견

D2. 소식통: 상황의 내막을 알리는 익명 정보원. 흔히 ‘소식통’이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D2. 소문: 사회에서 유통하고 있는 정보, 뚜렷한 근거 없음

D3. 탈북자: 북한 인민의 증언

D4. 국제 기구의 대표: 유엔, 적십자,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구의 대표

D5. 당국자: 해당 국가의 정부, 국회, 공공기관의 대표자

a) 남한 당국자: 국회, 통일부, 국방부의 대표

b) 북한 당국자: 외무부상, 인민군 최고사령부

c) 미국 당국자: 대통령, 국무부 대변인, 한미연합사령관

D6. 시민단체: 남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 조직

D7. 언론사: 국내외 방송, 라디오, 신문사

a) 북한 언론사: 중앙통신, 중앙 TV, 노동신문

b) 해외 언론사: VOA, RFA, 뉴욕 타임스, 이타르-타스

D9. 기타: 제 2 차 정보원, 불명확한 정보원, 문서 및 2 번 이하 나타나는 정보원

3) 프레임 분석

내용분석에서와 달리, 프레임 분석은 현저성(salience)과 생략(omissions)을 살펴보고 더 포괄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Gamson 1989). 또 프레임은 키워드, 이미지, 정보원 등 기성적 틀의 존재나 부재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Entman 1993). 따라서, 프레임 분석은 미디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적 틀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프레임 분석을 통해 명백한 내용과 같이 잠재적인 내용이 발견되기 덕분에 특정 기자의 패턴도 나타난다 (Gamson 1989). 이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질적 내용 분석이 사용된다.

사회적 프레임워크는 사건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고, 특정 규칙을 포함한다. 본래의 프레임워크 (primary framework)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본래의 프레임워크를 바꾸기에 저항한다 (Goffman 1974). 본래의 프레임워크는 자연적 현상을 규정하고 있다. 본래의 프레임워크는 통제되거나 지도되지 않으며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사실'로 인지된다. 반면, 사회적 프레임워크는 목적, 의도, 매개자를 담고 있는 사건의 이해를 제공한다. 즉 그런 사건이 특정 규정에 맞춰진 '통제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건을 대체적으로 본래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프레임은 사건들을 통제하고 있는 조직의 규정 및 우리의 그 사건에 대한 주관적 연루로 인해 구성된다. 따라서, 프레임 분석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미디어 프레임은 정보 코딩, 해석 및 추출하기 위한 인식적 수단이며 그에 따라 프레임은 뉴스 내용의 구성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뉴스는 한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치 시스템 이내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러한 가치의 의미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가 그 가치를 믿고 쉽게 동의하는 것이다. 그 가치는 뉴스 구성 범의의 요소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팬과 코시키(2010)는 그러한 요소의 배열을 어떤 사건을 볼 수 있는 ‘인식의 창문’이라고 제의했다.

프레임의 요소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구조적으로 배열된 사전적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 제작자는 뉴스를 구성하고 수용자에게 심리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사회에서 인지할 수 있는 옵션을 사용한다. 팬과 코시키는 프레이밍 수단을 구문론적 구조, 스크립트 구조, 주제 구조 및 수사 구조 총 4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행렬 형식으로 된 프레이밍 분석을 제안했다 (Pan & Kosicki 1993).

Dijk 는 뉴스의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휘 선택을 강조했다. 특정 어휘 선택은 형식성의 수준, 행위자 간의 관계성, 무엇보다 태도와 이데올로기를 나타낸다. 한 현상이나 행위자를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다. 또한 언어 선택은 전문적인 관습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언론적 전략의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최진봉(2009)도 텍스트의 수사 구조 해석 중심으로 프레이밍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써 특정 관점을 강조하거나 간과하는 것을 통해 어떤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 봤다. 구문론적 구조는 텍스트의 문장, 단락 등 구성의 패턴을 의미하는데 기사의 구조는 보통 제목, 리드 (lead), 에피소드, 배경 및 종결로 나타내는 ‘반전된 피라미드’ 구조이다. ‘반전된 구조’의 요소의 중요성이 제목부터 종결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제목과 리드가 제일 주목되는 요소다. 또한, 기자들은 ‘밸런스’ 혹은 ‘중립성’을 구문론적 구조의 요소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립성은 프레이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Pan & Kosicki 1993). 첫 번째는, 전문가나 실험적 정보 인용인데, 이 방법은 뉴스의 실험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두 번째는, 기사가 공무원이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하여 특정 관점을 강조시키도록 한다. 반면, 특정 관점이나 의견을 사회의 상식을 벗어난 사람에게 연결시킴으로써 그 특정 관점을 논의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벨(1991)은 뉴스의 형식이 뉴스의 가치와 연결되며 뉴스의 가치가 뉴스의 형식을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의 가치를 3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뉴스의 주인공 및 사건의 가치다. 이 요소들이 뉴스의 중요성을 늘릴 수 있으나 선입관을 추가할 수도 있다. 이 차원에서 뉴스의 부정성, 시의성, 횡수, 근접성, 의미성, 명확성이 중요하다 (Bell 1991). 다른 한편으로는, 쿤치크 (1997)은 뉴스 가치는 뉴스 제작자가 수용자의 취향에 대해 추측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제구조는 뉴스의 주제 및 그에 관한 가설, 증거를 포함한다. 다만, 모든 뉴스가 사건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기사가 논의를 주목한다. 그러한 기사의 주요 요소는 가설이며, 그 가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기사의 목적이다. 중요한 점은, 사건 중심으로 제작된 기사도 가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기사에서 나타나는 행위,

발언, 인용 등이 실험적 근거로 이용된다 (Pan & Kosicki 1993). 가설이나 주장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맥락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주제구조는 보통 추록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추록은 제목, 리드 혹은 결론으로 나타난다. 본문은 에피소드, 배경, 인용을 포함하여, 여러 부주제로 나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제구조는 복잡하고 계급적 구조이다 (Pan & Kosicki 1993).

수사 구조는 기자의 문체론적 선택을 의미한다. 깬슨과 모디글리아니 (1989)는 은유, 실례, 표어, 시각적 이미지 등 프레이밍 수단을 수사 구조의 요소로 꼽았다. 기자들이 다양한 수사구조 요소를 활용하여 뉴스의 현저성과 효과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뉴스의 설득과 사실성이 구별되지 않고, 뉴스 사실성과 중립성에 대한 주장 자체가 설득 수단이 된다. 쿤치크는 특히 표어를 설득력이 높은 문체론적 수단으로 보았고, 표어는 긍정적 이미지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 제작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태세’ (state security), ‘공산주의적 음모’ (communist conspiracy)와 같은 표어 사용이 바로 부정적인 연상을 이끌어낸다 (Kunczik 1997). 이에 대해 베질리(2013)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설명하여, 언어의 특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이야기는 기호적 의미와 같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적 특징이 텍스트에 특별한 의미를 주고 텍스트의 해석에서 빼 수 없는 부분이다.

최진봉(2009)은 프레이밍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도의 의미, 구성 방법 및 전략을 분석해 봤고, 프레임 분석을 논조와 양적 내용 분석에 근거했다. 최종환·하진홍(2016)도 프레임의 틀을 도출하기 위해 전체 분석 자료의 특정 비율을 추출하였고 그 부분에서 나타난 사건의 원인, 결과 및 해결책을 정리한 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패턴으로 삼았다. 다만, 프레임 분석을 취하는 경우에 양적 내용 분석에 집중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김영희 2007, 이화행 2012) 이러한 방식으로써 종합적 프레임이나 이미지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즉, 기사의 맥락, 구조 등 프레이밍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특정 방법, 샘플링 방식, 분석 대상, 시기 선택에 관련된 제한이 없지 않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연구의 한계로 꼽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非)비례적 층화 추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북 보도 전체 아니라, 그 보도의 한 몫만 분석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여 전체 대북 보도를 일반화시킬 수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최대 수량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무현 정권시기와 이명박 정권 시기를 집중하는데 다른 정권 시기를 더 살펴보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극우파나 극좌파에 지나치지 않은 신문사를 분석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연구를 제한한다. 또한, 중앙일보가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서 이 신문에서 실렸던 대북 보도를 분석할 때 그러한 신문사의 정파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의 신문사 중 두 개만 살펴봤는데, 분석 대상을 넓힘으로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 연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프레임 설정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 프레임의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밝혀야 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시기에 따라 또는 미디어가 구성하는 프레임에 따라 정확히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을 설정하는 방식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프레임을 설정하는 미디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 3 장 양적 분석과 프레임 분석 결과의 해석

제 1 절 양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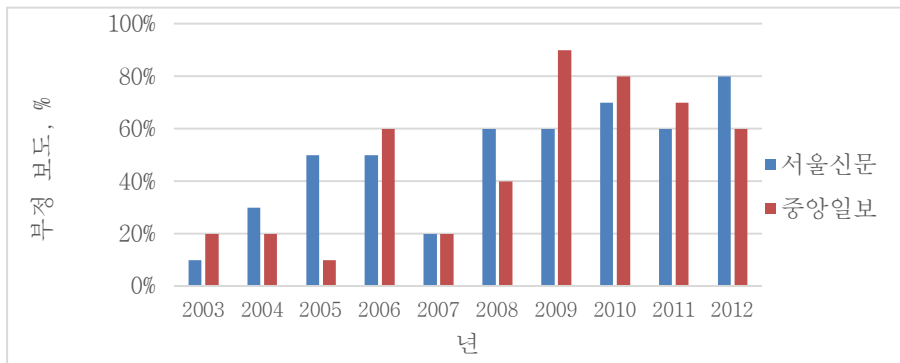
1) 대북 언론보도의 논조

본 연구에서 분석했던 대북 보도의 종류는 스트레이트 뉴스 (41.0%), 해설 (23.0%), 사설 (22.5%), 칼럼 (8.5%), 기획 기사 (5.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보도 논조는 기사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사설 기사, 칼럼, 해설의 경우에 논조 차이가 더

분명해지는데, 북한에 대한 기사의 경우에는 정보의 특성상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도 논조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다 (정영철 외 2013).

다이아그램에서 보이다시피 긍정 논조는 서울신문에서 2003 년 및 2004 년에 20%로 나타났으며, 2005 년에 30%를 달성했다. 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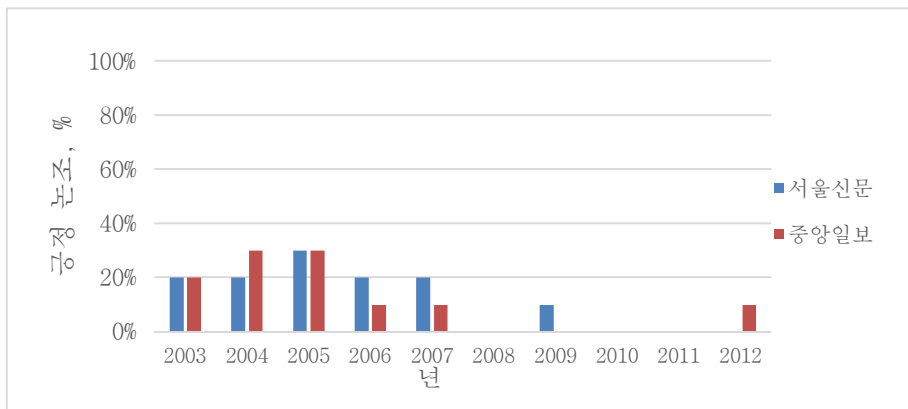
<그림 2>대북 언론보도의 부정적 논조, %



2006 년에 다시 20%까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009 년에만 10%로 다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일보에서는 긍정 논조가 2003 년에 20%로 나타났고

<그림 1>대북 언론보도의 긍정적 논조, %



2004 년에 40%까지 늘어나서 2005 년에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다만 2006 년에 10%까지 하락하였으며 2008 년에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긍정 논조가 2012 년에 10%로만 다시 나타났다.

부정 논조는 긍정 논조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신문사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우선, 부정 논조의 비율은 서울신문에서 2003 년 10%부터 2005 년의 50%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부정적 논조는 2007 년에 20%까지 하락했으나 2008 년에 다시 60%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1 년에 줄어들자 2012 년에 80%를 달성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부정 논조는 2003 년에 보도의 20%로 나타났으며, 2005 년에 서울신문과 달리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지만, 부정 프레임의 비율이 서울신문과 나란히 급격히 증가했다. 그 이유로 북한의 핵실험을 꼽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07 년에 부정 논조가 20%까지 줄었는데 2007 년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08 년에 부정 논조가 2 배로 증가하였고 2009 년에 절정인 90%에 달성했다. 그 다음에 부정 논조가 10%로 줄어들자 2012 년에 60%에 달하여 중앙일보 대북 보도의 절반 이상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권 시기별 보도 비교이다. 따라서, 보도 프레임의 연도별 차이뿐만 아니라, 정권 시기별로도 살펴볼 것이다.

<표 1> 대북 보도의 논조, 2003~2007 (%)

	서울신문	중앙일보	합계
부정	16 (32%)	15 (30%)	31 (31%)
중립·혼합	22 (44%)	25 (50%)	47 (47%)
긍정	12 (24%)	10 (20%)	22 (22%)

정권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 (표 1) 『서울신문』의 대북 논조는 ‘중립·혼합’ 22 건 (44%), ‘부정’ 16 건(32%), ‘긍정’ 12 건(2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일보』는 ‘중립·혼합’ 25 건(50%), ‘부정’ 15 건 (30%), ‘긍정’ 10 건(24%) 순으로 나타나 서울신문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표 2> 대북 보도의 논조, 2008~2012 (%)

	서울신문	중앙일보	합계
부정	33 (66%)	34 (68%)	67 (67%)
중립·혼합	16 (32%)	15 (30%)	31 (31%)
긍정	1 (2%)	1 (2%)	2 (2%)

반면 이명박 정권 시기 (표 2) 『서울신문』의 대북 프레임은 ‘부정’ 33 건(66%), ‘중립·혼합’ 16 건 (32%), ‘긍정’ 1 건 (2%)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에서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 신문의 대북 논조는 ‘부정’ 34 건 <68%>, ‘중립·혼합’ 15 건 (30%), ‘긍정’ 1 건 (2%)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았듯이, 부정 논조는 2008 년 이후 『서울신문』 및 『중앙일보』에서 부정 논조가 종합적으로 67%까지 늘어났다. 반면, 중립·혼합 논조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2008 ~2012 년에 종합적으로 3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긍정 보도 논조가 2%로만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권 시기의 22%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다음 단계는 양적 내용분석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유목의 빈도수를 계산했다. 앞서 5 개의 유목을 정리해 봤지만, 양적 내용분석을 위해서 ‘주제’, ‘북한의 역할’ 및 ‘대북정책 제의’, ‘정보원’ 총 4 개 유목을 분석해 보겠다.

본 연구에서 기사의 일관성에 따라 코딩 유목을 여러 가지 사용했기 때문에 코딩 단위가 기사의 횟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 유목의 비율은 전체 코딩된 내용의 비율이다. 한편, 아래의 비율을 통해 특정 주제와 프레임의 현저성을 알 수 있다.

2) 내용 분석

A. 주제

먼저 ‘주제’ 즉 핵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 보겠다 <표 3>.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북핵 82 건(16%)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회담 및 내부 사정이 각각 51 건 (10%), 인권 45 건 (9%), 미사일

발사/교전/훈련 및 경제적 문제 각각 44 건 (8%), 6 자회담 36 건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3 년에 정상회담·회의와 공동행사·사업 및 북핵 주제 비율이 제일 높았다 (각각 15.4%). 하지만, 2004 년에 핵개발 문제 비율이 (20.9%) 6 자회담 주제 비율이 (16.3%) 높아진 반면 정상회담이나 공동행사의 대한 언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11.6% 및 7%). 2005 년에 6 자회담 이슈가 15.4%로 나타나며 우세한 주제로 보인다. 같은 2005 년에 핵개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자 2006 년에 26%까지 달성했다. 즉, 핵개발 문제의 현저성이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07 년에 정상회담·회의가 제일 높은 (16.1%) 순위로 나타났다. 2008 년 및 2009 년에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의 비율이 다시 증가했지만, 2010 년과 2012 년에 미사일 발사/교전/훈련이 우세했다 (각각 27.3% 및 22.2%). 2011 년에 내부 사정에 관련 이슈가 29.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김일성의 사망 및 북한의 정권 교체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문제가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권 시기보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더 자주 나타났다.

B. 대북 정책 제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북정책 제의’라는 유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 33 건 (26%)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회의·대화 21 건 (16%), 기타 18 건 (14%), 다자간의 합의 17 건 (13%), 전투태세 강화 15 건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2003 년에 대책 마련이 33.3%로 가장 흔한 정책 제의였는데 회의 및 대화 (20%)와 다자간의 협의(13.3%)도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2004 년에도 중립적 정책 제의가 우세했다. 2005 년에 기타(26.7%) 와 ‘협력 기타’ (20%)라는 유목의 비율이 제일 높았고, 올바른 대북정책에 대한 의심과 동시에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다. 2007 년에 다자간의 합의 제의가 33.3%에 달성했고 회의 및 대화 제의가 비교적 높았다 (22.2%).

2008 년에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은 눈에 띄는데, 그 때의 비율이 제일 높은 ‘기타’ 정책도 2 개의 기사에서만 나온다. 2009 년에 남한 정책에 대한 의견이 분열했고, 회의 및 대화가 우세한 동시에 (27.3%) 전투 태세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없지 않았다 (18.2%). 2010 년 및 2011 년에 미래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중립적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2012 년에 전투태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41.7%).

C. 북한의 역할

‘북한의 역할’이라는 유목은 곧 프레임 분석의 마련이다. Goffman (1974)에 따라, 인간이 상회에서 특정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본질과

연결되지만 완전 유일하지 않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기 역할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역할 선택에 한계가 있다. 국가도 국제 무대에서 전략적 선택 및 행동을 하여 특정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역할이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최진봉 (2009)은 대북 보도 분석에서 비슷한 카테고리를 사용했고 ‘집단’ (cluster)라고 제시하여 북한의 역할을 적, 악마, 친구, 같은 민족, 테러국가, 가난한 나라, 독재국가, 기타 등 8 개의 집단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에서 비슷한 논리를 취했는데 덜 극단적인 카테고리를 사용했다. 북한의 역할 분석 결과가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역할은 대립자 71 건이(15%) 제일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군사적 위협 64 건 (13%), 협력자 56 건 (12%), 독재국가 55 건 (11%)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2003 년부터 2005 년까지 ‘협력자’라는 유목이 제일 많이 사용되었으며, 2007 년에도 우세했다 (21.7%). 다만, 2005 년에 ‘대립자’ 유목도 17.9%에 달성하여 현저성을 가지게 되었고 2006 년에 19.8%로 지배적인 카테고리가 되었다. 2008 년에 ‘대립자’ 및 ‘독재국가’ 카테고리가 제일 높게 나타났지만 ‘협력자’ 유목은 7.7%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한편, 2009 년에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대립자’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22.7% 및 20.5%), 2010 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 2011 년에 ‘독재국가’와 ‘개혁·개방의 대상’ 유목의 비율이 높았고 (24.1% 및 19%),

2012 년에도 이 두 유목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군사적 위협’도 흔히 사용되는 카테고리였다 (18.9%).

<표 3>대북 보도주제, 연도별. 건(%)

유목 년	6자 회담	경제 적 문제	공동 행사	납북	내부 사정	미사 일 발사, 교전	법적 문제	사업중 단	인권	정상회 담, 회의	제 재	탈북	통 일	북핵	기 타	계
2003	2	1	6	1	2	1	5	1	1	6	1	3	3	6	0	39
	5.1 %	2.6 %	15.4 %	2.6 %	5.1 %	2.6 %	12.8 %	2.6 %	2.6 %	15.4 %	2.6 %	7.7 %	7.7 %	15.4 %	0.0 %	100.0 %
2004	7	3	3	3	1	3	2	1	3	5	0	3	0	9	0	43
	16. 3%	7.0 %	7.0 %	7.0 %	2.3 %	7.0 %	4.7 %	2.3 %	7.0 %	11.6 %	0.0 %	7.0 %	0.0 %	20.9 %	0.0 %	100% %
2005	8	0	4	1	6	1	5	4	5	3	2	2	4	7	0	52
	15. 4%	0.0 %	7.7 %	1.9 %	11.5 %	1.9 %	9.6 %	7.7 %	9.6 %	5.8 %	3.8 %	3.8 %	7.7 %	13.5 %	0.0 %	100% %
2006	3	3	4	2	1	1	5	5	4	3	4	2	0	13	0	50
	6.0 %	6.0 %	8.0 %	4.0 %	2.0 %	2.0 %	10.0 %	10.0 %	8.0 %	6.0 %	8.0 %	4.0 %	0.0 %	26.0 %	0.0 %	100% %
2007	6	5	7	3	2	2	3	3	4	10	2	2	4	9	0	62
	9.7 %	8.1 %	11.3 %	4.8 %	3.2 %	3.2 %	4.8 %	4.8 %	6.5 %	16.1 %	3.2 %	3.2 %	6.5 %	14.5 %	0.0 %	100% %

유목 년	6자 회담	경제 적 문제	공동 행사	납북	내부 사정	미사 일 발사, 교전	법적 문제	사업중 단	인권	정상회 담, 회의	제 재	탈북	통일	북핵	기 타	계
2008	5	8	6	0	3	0	3	3	9	6	0	2	0	12	0	57
	8.8 %	14.0% %	10.5% %	0.0% %	5.3 %	0.0 %	5.3 %	5.3% %	15.8 %	10.5% %	0.0 %	3.5% %	0.0 %	21.1 %	0.0 %	100%
2009	2	5	4	4	8	7	4	2	5	8	6	2	0	9	1	67
	3.0 %	7.5% %	6.0% %	6.0% %	11.9 %	10.4 %	6.0 %	3.0% %	7.5 %	11.9% %	9.0 %	3.0% %	0.0 %	13.4 %	1.5 %	100%
2010	0	4	3	0	3	12	0	1	3	5	0	1	3	7	2	44
	0.0 %	9.1% %	6.8% %	0.0% %	6.8 %	27.3 %	0.0 %	2.3% %	6.8 %	11.4% %	0.0 %	2.3% %	6.8 %	15.9 %	4.5 %	100%
2011	1	11	1	0	16	5	0	1	8	4	0	1	3	3	0	54
	1.9 %	20.4% %	1.9% %	0.0% %	29.6 %	9.3 %	0.0 %	1.9% %	14.8 %	7.4% %	0.0 %	1.9% %	5.6 %	5.6 %	0.0 %	100%
2012	2	4	1	3	9	12	4	1	3	1	1	3	1	7	2	54
	3.7 %	7.4% %	1.9% %	5.6% %	16.7 %	22.2 %	7.4 %	1.9% %	5.6 %	1.9% %	1.9 %	5.6% %	1.9 %	13.0 %	3.7 %	100%
합계	36	44	39	17	51	44	31	22	45	51	16	21	18	82	5	522
	7% %	8% %	7% %	3% %	10% %	8% %	6% %	4% %	9% %	10% %	3% %	4% %	3% %	16% %	1% %	100%

<표 4>대북 보도주제, 연도별, 건(%)

반항	중립	협력	기타	계
----	----	----	----	---

<표 5> 대북정책 제의, 연도별. 건 (%)

년	유목									
	전투태세 강화	제재	다자간 합의	대책 마련	경제적 협력	인도적 협력	회의 및 대화	협력 기타		
2003	1	1	2	5	0	1	3	1	1	15
	6.7%	6.7%	13.3%	33.3%	0.0%	6.7%	20.0%	6.7%	6.7%	100.0%
2004	1	1	5	9	1	3	4	0	2	26
	3.8%	3.8%	19.2%	34.6%	3.8%	11.5%	15.4%	0.0%	7.7%	100.0%
2005	0	0	1	4	1	0	2	3	4	15
	0.0%	0.0%	6.7%	26.7%	6.7%	0.0%	13.3%	20.0%	26.7%	100.0%
2006	1	0	3	1	1	0	2	1	0	9
	11.1%	0.0%	33.3%	11.1%	11.1%	0.0%	22.2%	11.1%	0.0%	100.0%
2007	0	0	2	3	2	0	3	1	1	12
	0.0%	0.0%	16.7%	25.0%	16.7%	0.0%	25.0%	8.3%	8.3%	100.0%
2008	0	0	0	0	0	1	1	0	2	4
	0%	0%	0%	0%	0%	25%	25%	0%	50%	100%
2009	2	0	0	1	0	2	3	1	2	11
	18.2%	0.0%	0.0%	9.1%	0.0%	18.2%	27.3%	9.1%	18.2%	100.0%
2010	3	0	1	5	0	0	1	2	3	15
	20.0%	0.0%	6.7%	33.3%	0.0%	0.0%	6.7%	13.3%	20.0%	100.0%
2011	2	0	1	4	0	0	1	1	1	10
	20.0%	0.0%	10.0%	40.0%	0.0%	0.0%	10.0%	10.0%	10.0%	100.0%
2012	5	1	2	1	0	0	1	0	2	12
	41.7%	8.3%	16.7%	8.3%	0.0%	0.0%	8.3%	0.0%	16.7%	100.0%
합계	15	3	17	33	5	7	21	10	18	129
	12%	2%	13%	26%	4%	5%	16%	8%	14%	100%

<표 5> 북한의 역할, 연도별, 건 (%)

년	협력자	군사적 위협	피해자	예측 불가능한 나라	원조의 대상	국제법 위반자	대립자	개혁·개방의 대상	실패국가	독재국가	불투명	계
2003	7	3	2	4	4	4	5	5	4	0	6	44
	14.0%	6.0%	4.0%	8.0%	8.0%	8.0%	10.0%	10.0%	8.0%	0.0%	12.0%	100.0%
2004	7	5	3	3	5	0	3	5	3	3	6	43
	16.3%	11.6%	7.0%	7.0%	11.6%	0.0%	7.0%	11.6%	7.0%	7.0%	14.0%	100.0%
2005	8	1	4	5	4	2	7	2	2	0	4	39
	20.5%	2.6%	10.3%	12.8%	10.3%	5.1%	17.9%	5.1%	5.1%	0.0%	10.3%	100.0%
2006	9	6	1	10	5	2	4	5	3	1	5	51
	17.6%	11.8%	2.0%	19.6%	9.8%	3.9%	7.8%	9.8%	5.9%	2.0%	9.8%	100.0%
2007	10	3	2	3	6	2	6	3	3	2	6	46
	21.7%	6.5%	4.3%	6.5%	13.0%	4.3%	13.0%	6.5%	6.5%	4.3%	13.0%	100.0%
2008	4	4	0	4	5	1	11	5	5	9	3	51
	7.8%	7.8%	0.0%	7.8%	9.8%	2.0%	21.6%	9.8%	9.8%	17.6%	5.9%	100.0%
2009	3	10	0	5	3	1	9	1	2	7	3	44
	6.8%	22.7%	0.0%	11.4%	6.8%	2.3%	20.5%	2.3%	4.5%	15.9%	6.8%	100.0%
2010	4	12	2	10	1	0	10	3	4	8	2	56
	7%	21%	4%	18%	2%	0%	18%	5%	7%	14%	4%	100%
2011	4	9	0	2	4	0	5	11	7	14	2	58
	6.9%	15.5%	0.0%	3.4%	6.9%	0.0%	8.6%	19.0%	12.1%	24.1%	3.4%	100.
2012	0	10	0	7	1	6	11	2	4	11	1	53
	0.0%	18.9%	0.0%	13.2%	1.9%	11.3%	20.8%	3.8%	7.5%	20.8%	1.9%	100.0%
합계	56	64	14	53	38	18	71	42	37	55	38	485
	12%	13%	3%	11%	8%	4%	15%	9%	8%	11%	8%	100%

D. 정보원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2003~2007년에 '남한 당국자'라는 유목을 사용한 기사가 22건, '교수-연구기관' 13건, '소문' 8건, '탈북자'와 '북한 언론사'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는 나란히 남한 정치인을 제일 많이 인용했다. 다만, 『서울신문』은 탈북자의 증언 및 소문을 더 많이 활용한 반면, 『중앙일보』는 '북한 언론사'를 인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2012년에 '남한 당국자'를 인용한 기사가 25건, '교수 연구자' 23건, '북한 언론사' 22건, '소식통' 21건, '해외 언론사' 10건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익명으로 된 '소식통' 정보원 사용 증가가 눈에 띈다.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언론사들은 정보원 사용 영역에서도 상당한 시기별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남한의 정치권 및 교수, 연구기관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 시기에 상관없이 우세했는데 북한의 당국자를 인용하기가 제일 드물었다.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에 관련된 뉴스에서 북한이 '정보원'보다 '행위자'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더 높다 (부록 표 8 참조). 둘째, 뉴스 보도는 국내 이슈와 의견을 주목하기 때문에 국내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뉴스는 정보원을 활용하여 특정 관점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 의견을 간과하는 경향도 있다 (Kunczik 1997).

결국 한국 언론사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프레임과 북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북 보도에서 사용하는 정보원이다. 익명 정보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도에서 나온 정보가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점이 있다.

임양준(2013)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면서 정보원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김성해는 언론사들의 정보원 활용의 중요한 특징을 언급했다. 첫째, 언론의 뉴스프레임은 포격, 테러, 전쟁과 같은 군과 관련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의 정보통제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통제 때문에 언론은 사실적 정보원에게 접근이 허락되지 않고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진다. 정부와 군 당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사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언론이 자신들의 이념을 전개하는 방법 중 유사한 성향의 정보원을 통해 주장이나 의견만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신문사는 자신과 같은 성향을 가진 언론사 필진에 의존함으로써 언론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의 의미를 개진하기도 한다. 문제는 신문이 논평이나 해설을 기득권층 정보원에게만 의존한다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의 기능 중 하나는 사실보도 차원을 넘어 사회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언론은 수용자의 태도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원 사용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김동윤-김성해(2012)도 대한민국 언론사의 정보원 활용 패턴을 분석하면서 한국 뉴스가 공식 정보원 활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공식 정보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한국 사회의 인적, 정치적, 문화적 등 인프라가 중앙에 집중된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내 신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명 정보원 활용이 한국 사회의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에 한정되어 있다. 또 본 연구에서 실명 정보원 활용도 자체가 낮고, 익명 정보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되었는데, 김동윤·김성해(2012)는 이를 국내 신문은 ‘취재원 비닉’이라는 법적 보호 장치를 정치 및 경제 엘리트 정보원 보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표 6>정보원 활용, 2003-2007. 건 (%)

정보원	서울신문	중앙일보	계
탈북자	5 (10%)	2 (4%)	7
언론사	북한언론사	6 (12.0%)	8
	해외언론사	1 (2.0%)	6
시민단체	2 (4.0%)	2 (4.0%)	4
소식통	4 (8.0%)	1 (2.0%)	5
소문	5 (10.0%)	3 (6.0%)	8
당국자	남한	11 (22.0%)	22
	북한	3 (6.0%)	9
	미국	2 (4.0%)	3
국제기구의 대표	4 (8.0%)	2 (4.0%)	6
교수-연구기관	5 (5.0%)	8 (16.0%)	13
기타	0 (0%)	5 (10.0%)	5
합계	47	49	96

<표 7> 정보원 활용, 2008-2012. 건 (%)

정보원	서울신문	중앙일보	계
탈북자	0	3 (6.0%)	3
언론사	북한언론사	14 (28.0%)	22
	해외언론사	3 (6.0%)	10
시민단체	2 (4.0%)	1 (2.0%)	3
소식통	9 (18.0%)	12 (24.0%)	21
소문	3 (6.0%)	1 (2.0%)	4
당국자	남한	11 (22.0%)	25
	북한	3 (6.0%)	6
	미국	1 (2.0%)	4
국제기구의 대표	0 (0%)	0 (0%)	0
교수-연구기관	11 (22.0%)	12 (24.0%)	23
기타	1 (2.0%)	4 (8.0%)	5
합계	58	68	126

본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북 언론 보도의 정보원 활용 패턴도 역시 그런 문제가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보도는 안보와 관련된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러한 보도에서 사용하는 정보원은 주로 국방부와 정부의 익명 관계자에 의존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에 남한 정치인을 인용 빈도가 눈에 띈다. 반면, 북측 정보원 활용도 낮고, 북측 정보원 활용이 주로 『노동신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정보원 활용 빈도 자체가 이명박 정권시기에 노무현 정권시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언론사가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북측 정보원을 활용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지식인, 연구소 등 실명 정보원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소식통 등 익명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도 늘어났다.

제 2 절 프레임 분석 연구 결과

1. 노무현 정권 시기

1) 주제 구조

연구 목적 중 하나는 북한의 종합적, 포괄적 이미지 재구성 및 그의 변화를 분석할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주제 구조와 수사 구조를 중심으로 프레임 분석을 실시했고, 기사의 구조적 및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도록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뉴스의 주제구조는 크게 추록과 본문으로 나뉘는 계급적 구조이다. 이 계급적 구조 이내에 주요 주제와 몇 부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 기사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제의 현저성과 전체 기사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틀 짓기를 파악하기 위해 대북 보도의 주제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 보도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를 선택했고, 그 주제가 기사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분석해 봤다.

우선 '6자회담'이라는 주제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겠다. 『중앙일보』도 2006 년에 기재되었던 기사 중 하나는 6자회담을 '미·북 치킨게임'이라는 표현으로 제시하여 눈에 띄는 제목을 사용했다. 리드도 북미 관계를 치킨게임과 비교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립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요 주제는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북한 문제로 인한 동북아 협력 강화이다. 기자의 가설에 따라, 북한 문제는 동북아 국가들 서로와 협력하게 만들었고, 6자회담은 동북아 안전문제를 합의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서 북한의 행위 배경을 ‘국제사회를 분열시키는 의도’로 해석한 것이 눈에 띈다. 그 다음에 6자회담 남한, 북한, 미국 또는 중국의 입장이 설명되며 가설의 논리적인 근거가 된다. 다자 국가들은 북핵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반면 북한이 6자회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끈다’는 주장이 있어서 북한이 세계사회의 반대자로 나타난다.

결론에서는 기자가 한미 동맹 관계의 약화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고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또 기자는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골칫덩어리’로 제시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수사 구조

2003년~2008년에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에서 여러 긍정적 프레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협조에 나오거나 핵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한 경우 언론 보도가 남북관계 계승 및 통일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특히 북한이 먼저 행사나 회의를 제안한 경우에 북한 및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서울신문』에서: “북한이 먼저 적십자 접촉을 제의한 것은 다른 채널의 대화도 재개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보고 남한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논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북간의 대화 및 인도적 협조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북한이 이러한 보도에서 ‘협력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남한 정부측에서 주도력 강화에 대한 요구가 그 시기의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장이다. 중앙신문도 2004년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일처럼 말아라’라는 눈에 띄는 제목 아래의 기사를 발효했고, 이 기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공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에 북한이 보통 ‘원조의 대상’ 및 ‘피해자’로 등장했지만, ‘원조의 대상’이라는 유목이 ‘피해자’ 유목보다 더 자주 사용했다. ‘피해자’는 북한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공감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 전체에 대한 공감은 예외적이기 때문이다.

최진봉(2007)에 따라, 대북 긍정적 프레임 중에 하나는 ‘한 민족, 한 혈통’이라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2003~2012년에 기사에서 또 다른 경향을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민족’이라는 프레임이 활용되기도 한다: ‘동포’, ‘형제’, ‘한 민족’, ‘동적인 북한 주민’이라는 표현이 남북 협력 찬성하는 관점 증명을 위해 이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시에 남한과 북한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원은 평화 공존’이라는 글에서 기사가 북한 주민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며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안 맞는 상황이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권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서울신문』은 미국의 ‘인권 발언’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지적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비정치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다른 보도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서울신문』에서 기재되었던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에 대한 사설은 북한의 행위를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라고 제시한 바 있다. 『중앙일보』도 2006년에 북한 내에서 종교침투에 대해 보도하여 북한의 종교에 대한 탄압 조치를 자세히 묘사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더 현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남한이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처음으로 지지한 후, 인권 탄압에 대한 언론의 논의가 더욱 더 악화해졌다. 예를 들어서, 2009년 『서울신문』은 북한 정권이 구권 화폐를 당국에 신고하기보다는 소각하는 쪽을 택하는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 굴뚝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이를 ‘통제 강화’ 의도로 해석했다. 2012년에 북한에서 아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했으며 식량 지원이 아예 주민에게 전달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했다.

2. 이명박 정권 시기

1) 주제 구조

앞서 보았듯이 2008~2012년 『중앙일보』에서 6자회담 중심으로 나온 기사가 많지 않으며, 그 대신 ‘경제적 문제’가 현저성을 가지게 되었다.

2009년에 발효했던 “남한 비디오에 골치 앓는 북한 ‘겨울연가·나혼아’ 단속반 꾸려”라는 기사는 북한의 내부 상황 및 경제적 문제를 살핀다. 제목과 리드에 볼 수 있듯이, 기사의 핵심 주제는 북한 이내의 인권 실태와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다. 또한, 리드는 이 정보의 정보원 (통일연구원 인권백서)와 발효 날짜 등 상세 정보를 알려준다. 기사는 주로 백서를 직접 인용하며, 기자가 이 정보에 대한 주관적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

본문은 앞서 소개했던 핵심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첫 주요 주제는 북한 인권 실태이며, 본 기사는 북한 주민들의 외국 대중문화에 대한 갈망, 남한 녹화물 확산) 및 이에 관한 북한 정부의 조치(퇴학, 별도 상주 조직 설립 및 검열 강화)로 초점을 둔다. 두 번째 주제는 경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기사는 북한 주민 생활의 어려움, 빈곤과 그에 관한 지하 장사의 등장 및 증회를 주목한다. 부주제는 미신 행동에 대한 처벌 확산이며, 이 부주제가 인권문제 주제를 보충한다.

그 다음에 ‘공동 사업-행사’라는 주제를 주목한 기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2006년 『서울신문』에서는 ‘경협회담 마지막날…한강골재채취등 4개안 의견접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본 기사는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기사의 주요 아이디어가 제목에서 보인다. 즉, 경협회담의 끝 또는 4개안에 대한 사실상 합의가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리드는 회담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언급하고, 회담의 결과를 알려준다. 본문은

리드에서 알렸던 회담 결과에 대해더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며 남북 의견 갈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라고 중립적인 논조로 제시된다. 하지만,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과 관련된 기사에서 ‘요구했다’와 요구와 같은 의미 강한 동사가 이용되는데 이는 북한의 확고한 자세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남측의 남북간의 협력에 대한 전망 및 낙관적 입장을 밝힌다.

2008~2012년에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에서 미사일발사나 남북 교전, 천안함 침몰 사건 등 군사 문제가 2003~2007년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서울신문』에서는 ‘을 8월 감청통해 北공격 징후 확인’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기사가 나왔다. 이 제목은 국가정보원장의 말을 거의 직접 인용한 말인데, 리드에서도 같은 인용을 다시 볼 수 있고 본문은 발언의 배경 (국회 정보위원회)을 언급하며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기사가 전달하는 국가정보원장의 주장에 따라, 북한이 보통 공격에 대해 미리 언동 했기 때문에 군과 정보당국은 연평도 사건을 예상하지 못 했고, 대신 해안포 부대 사격준비를 했다. 또한 공격이 ‘반민족 행위’로 제시되어서 북한 행위의 비인간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야당인 민노당 대표자의 반대 의견도 언급되는 것은 의견 균형을 유지한다. 마지막 부분은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에 대한 논란을 주목한다. 요약하자면, 본 기사에서 북한이

또다시 위험하고 예상하지 못한 나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한국 군부와 국가정보원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도 밝힌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 논조를 갖는 기사를 분석해 봤는데 이를 위해 2007년에 『서울신문』에서 실렸던 “평양시민 환영→불면→걱정”을 긍정적 보도의 사례로 삼았다. 본 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을 핵심 주제로 삼는데, 짧은 제목을 사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감정을 뚜렷이 전한다. 리드도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톱뉴스가 된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며 제목을 보충한다. 본문은 평양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에서 평양시민의 말, 행동 및 ‘한껏’ 기분이 주목된다. 본 기사는 주로 북한측 정보원을 사용하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제일 북한 언론사 (『조선신보』)를 정보원으로 사용하며 이 정보원이 ‘북한 시민의 표정’을 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민대학습당의 김상환 연구사의 북측 정권 열망에 대한 말을 인용하여, ‘상기된 반응’으로 제시하여 북측의 남북 관계 정상화 및 통일에 대한 희망을 재확인 한다. 또한, 평양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만큼 북한 주민들의 남북 회담에 대한 이례적 관심을 주목한다. 이렇게 『서울신문』 보도는 조선신보의 본 회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평양의 분위기를 주목해서 긍정적 논조를 가지게 된다. 또한 본 기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평양의 반가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앞서 보았듯이, 핵심 주제가 제목, 리드, 본문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이끌어내고 수정하여 제목으로 삼는 것으로 인해 그 부분을 더 현저하게 만든다고 확인 할 수 있다.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가설을 볼 수 있으며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전문적, 공식적 정보원 사용, 부주제)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본 기사들은 북한에 대한 비판과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05~2006년 기재되었던 기사가 그렇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에서 기재되는 기사들은 북한 행위의 ‘비정상성’과 ‘위험성’을 강조해 왔는데 특히 인권 및 군사 사건에 대한 기사 경우에 그렇다. 그리고 정상회담이나 회의를 주목한 기사들은 북한의 완장을 제시하며, 북한의 타협에 대한 요구를 표명한다.

2) 수사 구조

앞서 보았듯이, 한국 보도에서 ‘대립자’라는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 중 하나이다. 우선, 신뢰할 수 없는 국가, 협력의 가능성을 과멸시키는 측으로 묘사한 바 있다. 북한이 ‘대화를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핵 포기과 국제의무 준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서울신문』 2003)는 주장이 2003~2007년 및 2008~2012년에 『서울신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프레임이다. 『중앙일보』도 역시 북한을 대립자로 인정하면서, 북측의 협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나오기도 했다. 이 프레임은 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거나 행사를 취소하는 보도에서 볼 수 있다. 한편, 2003~2007년에 북한 정권 및 남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공동적으로 나타난 보도가 많았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는 2006년에 열차 실험운행 계획의 취소에 대한 보도에서 북한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고 북한이 여전히 협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북한 대중매체를 인용하여, 북한이 남한을 ‘엉뚱하게’ 남한 내부 정세를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그와 동시에 남한 정부의 ‘낙관론’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합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 막대한 대북 지원, 또 남한 정치인의 ‘상황을 판단하지 못 한’ 것이 비난을 받았다.

2008-2012년에 대북 보도의 논조가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 프레임이 많아졌고 다양해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 『서울신문』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제시한 바 있고 북한의 ‘모험주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군사적 도발의 경우 북한이 그 도발을 ‘이유 없이’ 이루었다는 관점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중앙일보』도 ‘북한의 기습 도발’, ‘공세의 뒤편에서 도발’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개성공단에 폐쇄 가능성 및 그에 관한 북한의 요건을 ‘북한의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즉,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이 다양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비정상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보았듯이,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유목과 ‘군사적 위협’이라는 유목 간에 연관이 없지 않다. 북한의 실제 군사적 도발과 공격뿐만 아니라, 미래의 공격과 전쟁의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 영역에서 신문사들이 북한 행위에 대해 수 많은 가설을 제공한다. 『서울신문』은 2004년에 북한이 ‘핵 억지력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대한 핵 공격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핵 보유를 부추기는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2006년에 국방백서인용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위협하는 국가로 나타냈다.

『중앙일보』도 2006년에 국방백서를 분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핵 억지력 확보를 유일한 대응정책으로 취했다. 그리고 북한을 평화를 위협시키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민보다 군사력을 우선한다고 비판함으로써 북한의 ‘비인간성’이 다시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일보』는 2007년 북한 열병식에 대한 보도에서 그 행사를 병력시위로 분석했으며 ‘미제가 공격하면 섬멸하고 조국을 통일하겠다’와 같은 북한의 언론을 인용하여 북한의 공격성을 밝혔다.

2006년에 북한 문제로 인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북핵이란 엄청난 안보 비용을 줄이기’를 그 협력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즉, 북핵 및 군사적 역지력이 외교 수단과 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금융적 부담이다. 금융적 부담에 대한 언급을 대북 지원에 대한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중앙일보』 2008).

남한 언론사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또는 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은 2006년에 발생했던 봉화산호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미얀마를 “북한과 같은 군사독재 정권으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라고 제시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를 표현했다. 『중앙일보』는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빌려, 북한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와 간접적으로 비교해 봤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과도 비교가 되며, 북한의 개방에 대한 심상 요구와 기대도 나타난다 (『중앙일보』 2006, 『서울신문』 2007, 『서울신문』 2008, 『중앙일보』 2008). 이러한 방법으로 북한의 ‘실패국가’ 및 ‘개혁의 대상’과 같은 이미지가 구성된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나란히 엄격한 내부 정책에 주목했으나, 『서울신문』은 북한의 체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각각 34건 및 24 건). 2003~2007년에 『서울신문』은 한편 남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비난했음에도, 미국 정치인으로 인한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중앙일보』도 북-미, 미-일 관계를 살펴보면서

(『중앙일보』 2007) 남북 문제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이러한 경우에 북한의 이미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 언론사는 북한 내부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2008년에 칼럼을 통해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봤고 북한의 ‘선군 정치’와 노동당 및 군부 간에 있는 권력투쟁을 서술했다.

요약하자면, 노무현 정권 시기에 북한과 협력에 대한 희망을 보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보였다. 따라서, 그 시기에 북한이 잠재적 협력자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왔음에도, 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거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기사도 나왔다. 또한 북한에서 재난이 난 경우, 정권과 무관하게 ‘동적인’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었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한 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 한국 언론사들이 북한 주민의 빈곤, 북한 체제의 비인간성, 야만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이 ‘실패국가’로 나타나기도 했고, ‘원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영역에서 언론사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을 표명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와 남한 주민 간의 차이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8~2012년에 한국 언론사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북한의 언론사를 인용한 바와 같이 북한

이내의 권력투쟁, 지하 활동의 확산을 주목했다. 아사자가 늘어나는 것,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북한의 ‘비정상적’ 이미지를 더 현저하게 만든다. 북한의 개혁이나 협력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살아졌다고 할 수 없는데 그 변화를 위해 ‘체제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아졌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저항력을 지적하는 보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전 아시아를 위협시켜 핵 및 미사일을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견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북한이 군사력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특히 북한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와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빈곤, 군사적 체제, 인권 탄압이 그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행사 취소나 군사적 훈련이 제시될 때에, 그 행위의 ‘도련한 성질’이 강조된다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모험주의’도 어느 정도로 주목을 받았고, 특히 북-중 관계에 대한 보도 경우에 그렇다. 즉, 북한이 ‘모험주의자’나 ‘테러국가’와 같이 ‘실패국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과 북한에 대한 지원의 비용이 언급되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다른 국가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의견이 있다고 알려준다.

2008년쯤부터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대립성에 대한 비판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연평도 사건 및 천안함 사건이 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 보도의 논조를 고려하면,

해당 시기의 정권의 정책 및 발언이 그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제 4 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신문 기사의 논조, 특징 및 사용하는 프레임을 분석해 봤으며 2003~2007년 및 2008~2012년의 언론 보도를 비교해 봤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포괄적 이미지를 재구성하였으며 본 이미지의 변화를 찾아냈다.

무엇보다 뉴스가 특정 사건과 해석 방식을 선택한 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주관성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각 언론사가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변수로 인해 보도 주제와 보도 방식을 결정한다. 언론이 제공하고 있는 정치인 이미지, 국가 이미지도 같은 변수로 인해 형성된다. 대중매체는 프레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에 큰 영향을 주며, 이미지가 프레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서 대중매체가 거의 유일한 정보 차원이 된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구성하는 북한의 이미지가 보습되고 고정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국가의 이미지가 보통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장기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이미지가 역사 속에서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존속하지만 (Boulding 1959, Kunczik 1993)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Choi 2009).

본 연구는 2003~2012년 걸친 시기에 남한 신문에서 비친 북한의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 봤다. 연구자의 가설에 따라, 대북 보도가 해당 시기에 발생했던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며,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신문에서 반영된 이미지 및 그 변화 살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1) 2003~2012년 시기 동안 대북 보도의 논조, 주제, 정보원 활용 패턴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밝혔다. (2)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대북 보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레임을 사용했는지 살펴 봤다. (3) 노무현 정권 시기 및 이명박 정권 시기에 프레임으로써 제작된 북한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해 본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울신문』 및 『중앙일보』를 양적 내용 분석 및 프레임 분석을 통해 검토해 봤다.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문 보도의 내용 분석 면에서 정권에 상관 없이 중립적 논조를 가진 보도가 제일 많았다. 다만 노무현 정권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 논조를 가진 경우가 이명박 정권 시기의 기사보다 더 많았다. 반면, 이명박 정권 시기에 부정적 대북 논조를 가진 기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주제별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에 관한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남북회담, 내부 사정, 인권문제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 시기는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 공동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보도의 비율이 이명박 정권 시기보다 더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 취임한 2008년부터 미사일 발사/교전/훈련, 북한의 경제적 문제와 내부 사정에 관한 보도가 많아졌다.

또한, 신문기사가 몇 가지 대북정책 방안을 제안해 왔다. 그 중에서 대책 마련, 회의·대화, 다자간의 합의, 전투태세 강화 및 ‘기타’ 정책이 제일 흔한 제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살펴봤던 한국 신문사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중립적 정책을 제안했거나 미래의 대북 정책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할 수 있다.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노무현 정권 시기에 뉴스 보도가 중립적 대책 마련, 다자간의 합의와 남북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에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새 대책 마련과 안보 태세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

정보원 활용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남한 정치권 및 교수, 연구기관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 시기에 상관없이 우세했는데 북한의 당국자를 인용하기가 제일 드물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 이러한 정보원

활용 패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원 활용 패턴이 시기별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2003~2007년에 『서울신문』은 『중앙일보』에 비해 탈북자의 증언 및 소문을 다른 정보원 보다 더 많이 활용했다. 즉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언론사들이 정보 부족을 탈북자의 증언과 나란히 소문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서울신문』과 『중앙일보』가 똑같이 북한의 언론사와 해외의 언론사를 더 많이 인용하게 되었다. 2008~2012년에 '소식통'과 같은 익명 정보원을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프레임 활용도 정권 시기별로 공통점과 같이 차이점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대립자', '군사적 위협', '협력자', '독재국가' 및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었다. 즉 북측과 협의하는 것이 어렵고, 북한이 스스로 고립되고 모든 협력의 노력을 파괴한다는 표상이 우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05~2007년에 '협력자'가 지배적 프레임이었는데 그 원인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독재국가'와 '개혁·개방의 대상' 유목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저개발국' 및 '군사적 위협'이라는 프레임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즉 북한 정권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주민들의 인권 및 복지보다 군사적 개발을 우선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비판된다. 여러 보도에서는 북한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됨으로써 북한의 군사체제, 빈곤, 저개발이 또 다시 강조된다.

그리고 남한 신문사가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을 어느 정도로 표시했고 북한 주민들을 아직도 ‘동적’인 민족으로 인정하면서도 대량 탈북 및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심리적 차이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예상할 수 있듯이 북한의 종합적 이미지의 기본적 틀이 시기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2008~2012년의 보도에서 북한 이미지의 부정적 요소가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권 시기에 노무현 정권 시기보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내부적 문제가 더 많이 언급되었다. 중요한 점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언론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요컨대, 북한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행사를 취소한 등의 경우에 노무현 정권의 ‘낙관론’이 비난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권 시기에 신문사들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북측이 유일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한 주문도 바뀌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 불투명한 ‘정책의 전환’이나 ‘대책 마련’이 흔한 제안이었지만, 2008~2012년에 안보 태세 강화와 같은 정책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이명박 정권 시기에 연평도 교전과 천안함 침몰과 같은 큰 사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남북갈등이 없지 않았고, 무엇보다 북한이 그 때 1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봤듯이, 남한 언론사가 북한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해 왔고 북한에 대한 보도에서 다양한 프레임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북보도는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러한 논리를 계속 재생산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북 보도가 시기별로 바뀌었고 모든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을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종합적 이미지도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나, 그 이미지의 부정적 틀이 이명박 정권 시기에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무현 시기에 실렸던 대북 보도와 이명박 시기에 나온 대북 보도 간에 차이가 있다. 다만 북한의 이미지가 대북 보도의 성향이 변화된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국문

김관규. 2013. 「인쇄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동일 기사 제호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3 권 4 호. pp.135-155.

김동선. 2014. 「미군정하 『서울신문』의 경영과 정치적 성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권 2014. pp. 139-82.

김동윤, 김성해, 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언론과학연구』 13 권 3 호. pp. 75-95.

김성준, 이창현. 2002. 「북한 관련 TV 뉴스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9 호. pp. 95-123.

김성해. 2010. 「동아시아공동체와 언론: 동아시아지역과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한·중·일언론의 보도 비교」. 『언론과학연구』 10 권 1 호. pp. 77-123.

김주연. 2008. 『한국의 언론통제: 언론통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길 염원하며』. 서울: 리북.

김영옥. 2011. 「선전, 보수세력 그리고 언론: 선전전략으로서 ‘잃어버린 10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pp. 100-20.

김영희. 2007. 「한국정쟁 직전 통일문제에 관한 신문의 인식과 논조」. 『한국언론학보』 5 권 1 호. pp. 5-31.

- 김태균 외. 2013. 「대북 인식의 프레임과 네트워크: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 권 2 호. pp. 329-352.
- 김학노, 김두현. 2013. 「햇볕정책 이후 통일담론의 지형」. 『한국과국제정치 (KWP)』 29 권 3 호. pp. 49-76.
- 김해식. 1992. 「언론에 대한 국가개입의 구조 및 그 전개과정」. 『언론정보연구』 29 권. pp. 23-53.
- 정영철 외. 「대북 인식의 프레임과 네트워크: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 no. 2. p. 329.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안정식. 2002. 『햇볕정책과 북한의 실용주의적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pp.
- 엄상윤. (200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남북한 관계 전망」. 『평화학연구』 . 9 권 1 호. pp. 5-22.
- 이완수, 배정근. 2013. 「1994 vs. 2011 : 김일성과 김정일 사후 한국 언론의 북한문제 보도 프레임 변화」.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9 권. pp. 149-183.
- 이완수, 손영준. 2011.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6 호. p. 175-193.
- 이성로. 2010. 「한국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동향과전망』 80 권. pp.143-183.
- 이창현. 2013.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 분석과 평가」. 『정치정보연구』 16 권 2 호. pp. 225-266.
- 임수호. (2010). 「연구논문: 한국의 정권교체와 대북정책 변화: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9 권 2 호. pp. 135-165.
-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2 권 1 호. pp. 251-285.
- 윤석민. 2008.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언론정보연구』 45 권 1 호. pp. 29-66.

하승희, 이민규. 2012. 「북한주민 생활 실태에 관한 국내 신문보도 프레임연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8 호. pp. 222-241.

2. 영문

Bazeley, Patricia. 2003. *Qualitative Data Analysis: Practical Strategies*. London: SAGE.

Bell, Allan. 1991. *The Language of News Media*. Oxford: Language in Society.

Boulding, K.E. 195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 (2): 120-131.

Breen. M. J. (1997). A cook. a cardinal. his priests. and the press: Deviance as a trigger for intermedia agenda setting.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348-356.

Ch'oe, Chin-bong. 2009. *Framing North Korea*. 1st ed. Seoul: CommunicationBooks.

Fishman, Mark. 1988.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Entman, Robert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Gamson, William A., and Andre Modigliani.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37.

Gitlin, Todd. 2003. *The Whole World Is Watching*. 1st e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erman, E. and Chomsky, N. 1988. *Manufacturing consent*. New York: Pantheon Books.

Jeongsub Lim and Hyunjin Seo. 2009. "Frame Flow between Government and the News Media and its Effects on the Public:

Framing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1 (2): 204-223.

Kunczik, Michael. 2016. *Images Of Nations And International Public Relations*. 1st ed. Mahwah: Taylor and Francis.

Lasswell, H. and Leites, N. 1968. *Language of Politics : Studies in Quantitative Semantics*. Cambridge: M. I. T. Press.

Lim, J. and Seo, H. 2009. "Frame Flow Between Government And The News Media And Its Effects On The Public: Framing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1(2): 204-223.

Neuendorf, Kimberly A.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Pan, Z. and Kosicki. G.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no. 1: 55-75.

Saleem, N. 2007. "U.S. Media Framing Of Foreign Countries Image: An Analytical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Media Studies* 2 (1): 130-162.

Scheufele, D.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 (1): 103-122.

Vreese, Claes. 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dentifying Information And Tenor In Texts* 13(1): 51-62.

3. 온라인 자료

「서울신문안내」. 2017.

<http://www.seoul.co.kr/company/company.php?sub=tradition>. 접근일: 2017.3.15.

김태환. 2010. 「온라인 뉴스구독률 한국이 단연 최고」. 『The Science Times』, 5월 25일. <http://www.sciencetimes.co.kr/>

「중앙일보 연혁」. 2017. http://jmedianet.com/company_03_03.jsp.
 접근일: 2017.3.15.

ICT 통계센터. 2013.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열독 현황과 패턴 분석」. 『ICT 통계센터』.
http://m.kisdi.re.kr/mobile/repo/stat_view.m?key1=13192&selectPage=

〈부록〉

〈표 8〉 보도 행위자의 현저성. 건 (%)

행위자 \ 시기	2003-2007	2008-2012	계
탈북자	7 (7.0%)	6 (6.0%)	13
중국	17 (17.0%)	18 (18.0%)	35
일본	9 (9.0%)	3 (3.0%)	12
북한 주민	10 (10.0%)	11 (11.0%)	21
북한 정치권	61 (61.0%)	93 (93.0%)	154
북한 군	3 (3.0%)	2 (2.0%)	5
미국	21 (21.0%)	15 (15.0%)	36
러시아	3 (3.0%)	6 (6.0%)	9
남한 주민	15 (15.0%)	13 (13.0%)	28
남한 정치권	68 (68.0%)	50 (50.0%)	116
남한 군	3 (3.0%)	8 (8.0%)	11
국제기구	5 (5.0%)	5 (5.0%)	10
기타	9 (9.0%)	4 (4.0%)	13
합계	229	234	463

〈수사 분석에서 사용했던 기사〉

1. 6자회담은 '미·북 치킨게임' (논조: 부정)

북핵 6자회담은 다자회담이지만 미국과 북한 양국 간의 '치킨 게임'으로도 볼 수 있다. 치킨 게임이란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자동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어느 쪽 배짱이 센지 겨루는 시합이다.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 대신 핵무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뿐이다. 그동안 6자회담에서 다룬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9.19 공동성명'에 잘 반영돼 있다. 이 성명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나아가 동북아의 안보 질서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은 역설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분열을 노렸겠지만 반대로 동북아 지역에 이익이 걸린 국가들은 북핵이란 엄청난 안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설 기구가 필요한데 북한 덕분에 6자회담과 같은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한 국가 혼자서 북핵이란 '뜨거운 감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출범시켰다. KEDO에는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 참여해 경수로 건설에 들어갔다.

이어 99년 한.미.일은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운영했다. 그 후 한국전 당사국인

한국.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이 2003년 완성됐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다. 그래도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졌으며, 동북아의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기구로 떠올랐다.

북한의 10월 핵실험은 6자회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북한 간의 불신 때문에 양자 협상보다는 6자회담이 문제 해결에 더 적합한 협의체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6자회담은 북한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 어떤 의미 있는 합의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북한은 5개국에 이뤄낸 합의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종종 하곤 한다. 그나마 북한은 6자회담 틀에서 자신의 외교력이 돋보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의 역할도 커졌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에 '보다 유연하게 나오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소 아이러니컬하지만 북한 핵문제 때문에 중국-미국 관계가 부수적으로 좋아졌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미.중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일본의 군사 대국화 페이스를 조절할 수도 있다.

한국은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보다 더 예민한 입장이다. 햇볕정책으로 인해 오랜 우방인 미국과 동맹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6자회담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북 햇볕정책만을 강조하다가 동북아 지역에서 자칫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동북아에서 고립된다면 서울은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놓친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북한은 한국의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골칫덩어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남한 비디오에 골치 앓는 북한 ‘겨울연가·나훈아’ 단속반 꾸려 (논조: 부정)

북한에서 남한 비디오·CD 등의 시청이 번지면서 별도의 단속 조직까지 만들어졌다고 통일연구원이 27일 발간한 ‘2009년 북한 인권 백서’에서 밝혔다. 통일연구원이 매년 펴내는 인권 백서는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정리한 것으로 인권 상황과 함께 북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도 드러난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남한 드라마를 녹화해 파는 이들을 통해 ‘겨울연가’ ‘호텔리어’ ‘가을동화’를 봤다” “평양에서도 친한 친구들끼리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퍼졌다” “‘청춘의 덧’이 기억나는 남한 드라마”라고 밝혔다. 탈북자 중엔 ‘JSA’ ‘조폭 마누라’ 등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나훈아 콘서트를 CD로 봤다는 이도 있었다. 일부 탈북자는 “김정숙 교원대학에서 남한 녹화물을 본 학생 2명이 퇴학당했다”고 증언했다. 남한 녹화물 시청이 확산되자 북한은 인민보안성·보위부·검찰 등에서 합동 검열을 하다가 이들 기관원으로 ‘109 소조’라는 별도의 상주 조직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했다는 탈북자 증언까지 나왔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에 따르면 또 북한에선 식량난 이후 월급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결근한 채 장사에 나서는 주민이 크게 늘었다. “2004년부터 교장에게 돈을 주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장사했다” “기업소에 적만 걸어 놓고 하루 5000~1만원 정도를 (평양) 통일거리에서 벌어들여 이 중 (매달) 4만~5만원을 직장에 바쳤다” “시장에서 한 달치 월급(생산직 근로자 4000원)보다 많은 하루 5000원 정도를 번다”는 탈북자 증언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선 이들을 자투리 물자로 생필품을 조달하는 ‘8·3 제도’에 빚대 ‘8·3 노동자’로 부른다고 백서는 소개했다.

생계형 장사와 식량 확보를 위해 ‘여행증(여행허가서)’ 없이 돈이나 술·담배 등 뇌물로 검문을 피해 이동하는 경우도 급증했다고 한다. 미신 행위로 처벌하는 점도 확산되고 있다. “간부들은 하지 말라는데 부인들이 점을 본 뒤 이를 남편에게 얘기한다”거나 “42세 점쟁이 허모가 청진에서 사주를

봐주다 발각돼 2007년 노동단련대에 수감됐다”는 탈북자 진술을 백서는 소개했다.

3. 경협회담 마지막날... 한강골재채취등 4개안 의견접근 (논조: 중립-혼합)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 사흘째인 5일 밤 제주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위원장·위원 접촉을 잇따라 갖고 경협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열차 시험운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다.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과 경공업 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방안을 일괄타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 시험운행이 한 차례 취소됐기 때문에 시험운행을 위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열차 시험운행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할테니, 경공업 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합의문을 먼저 채택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차 시험운행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회담은 결렬 -일괄타결 -합의된 경협방안만 포함한 합의문 작성 등 어느 쪽으로 결론날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남북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등 4가지 경협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의견접근을 이룬 경협방안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남북의 제3국 공동진출 등이다.

관계자는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룬 3국 공동진출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라면서 “북측이 진출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원목, 석탄 채굴에 남측 자본을 투입해달라는 북측 제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천 민족공동자원개발특구 지정, 상업적 방식에 의한 축산협력, 북에 비료공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 4월 장관급 회담에서 요구했던 쌀 차관 제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남북 대표단을 위해 마련한 환송만찬에서 “어렵고 힘든 매일수록 남북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남북간 협력을 보다 가속화하고 전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 대표단은 6일 오전 제주를 떠나 인천국제공항,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4. “올 8월 감청통해 北공격 징후 확인” (논조: 부정)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일 “지난 8월 북측에 대한 감청을 통해서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확인, 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 국정원장은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도발 위협에 대한 언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인까지 공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대행 이범관 의원과 민주당 간사 최재성 의원이 전했다. 최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정도를 공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정보위원은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준비를 하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원 국정원장은 정보위에서 “23일 당일은 유선으로 작전을 했고 그 뒤로도 유선으로 통신을 해서 인명피해 등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원장은 또 북한의 포격 당시 해병대 연평부대의 대응사격에 대해 “우리가 80발의 대응사격을 했는데 45발의 탄착지점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45발 가운데 30발은 122mm 방사포를 쏘았던 개머리 지역에, 나머지 15발은 76.2mm 해안포를 발사한 무도에 탄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5발의 행방과 북측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사진으로 보니 북한의 포격 위치에 그을음이 있었다.”면서 “그 정도면 인명피해도 금방 확인이 될 텐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35발의 행방이) 추가로 확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원 국정원장은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은 명백한 군사침략행위로 반민족 행위”라면서 “3대 세습에 대한 내부 불만 및 경제사정 악화 등에 대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고 있고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추가 공격 위협이 농후하고 우리의 국론 분열 희책을 기도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평도 포격 당시 대통령의 ‘확전 자체’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이 TV 보도를 보고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국정원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5시쯤 TV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대통령도 그때 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5. “평양시민 환영→불면→걱정” (논조: 긍정)

평양의 4대 일간지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3일자 1면 톱뉴스로 다루는 등 평양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평양시민들은 “환영 불면 걱정”으로 관심과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3일 보도했다. 핵실험, 유엔

제재, 6자회담 등 북한 관련 이슈 때마다 북한 내부의 표정을 전해 온 조선신보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반주민의 표정을 상세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양 주민 대부분은 ‘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기회라는 ‘정치적’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20대 대학생은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아오를 것”이라고 말해 북한 젊은층은 경제 문제에 더욱 관심이 있음을 드러냈다. 평양 시민들은 노 대통령 방문 둘째날인 이날 “아침 바쁜 출근길에서도 북남정상분들의 영상이 실린 신문에 눈길을 모으며 통일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면서 “평양역과 평양 제1백화점, 지하철도역을 비롯한 신문 열람관이 있는 공공장소들과 신문매대들은 시민들로 붐볐다.”고 말했다.

인민대학습당 김상환 연구사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또 다시 용단을 내렸다.”면서 “김일성 주석님께서 평생을 바쳐 심혈을 기울여 온 조국통일이 장군님에 의해 드디어 성취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상기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전날 4·25문화회관에서 노 대통령을 맞는 장면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될 때 평양의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고 대부분 가정과 일터 등 TV가 있는 곳에서 TV를 지켜봤다.

조선신보는 또 “밤 10시 마지막 저녁보도가 끝났어도 남녀노소 각계층 시민들은 이번 북남정상회담의 성공을 믿어의심치 않는 듯 통일이야기로 밤 가는 줄,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보도했다.

노 대통령 내외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부인과 함께 넘기 위해’, ‘보다 의의있게 넘기 위해’ 주춤거렸다는 가벼운 해석까지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평양 중심가 카 퍼레이드에 대해서는 “연도에는 평양시민들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한겨레』·한핏줄을 만난 반가움이 수도의 거리에 넘쳤다.”고 밝혔다.

<Abstract>

The Change of the South Korean News Reports on DPRK in relation to ROK's Government Shift

-with focus on 2003~2012-

Bakhtiarova Ksenia

Korean Studies Department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during Roh Moo-hyun and Lee Myong-bak governing periods through the analysis of “Joongang Ilbo” and “Seoul Sinmun” newspapers. Roh Moo-hyun and Lee Myong-bak had opposite political views and thus implemented different policies towards North Korean policy. Besides, each presidential period is characterized by distinct relationships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news agencies, which definitely affected the media coverage.

It is especially the case with the North-South relations topic. Since there is lack of substantial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the media play crucial role in shaping of the North Korean image and make impact on mass consciousness about North Korea. The research aims at revealing the comprehensive image of the DPRK and its change by means of content and frame analysis techniques.

The results may be outlined as following. Firstly, from 2003 to 2012 most of the reports on North Korea have neutral tone. However, there were more positive reports about the DPRK during the Roh Moo-hyun presidential period than during Lee Myong-bak’s governance. By contrast, the percentage of negative reports about the DPRK was higher during Lee’s presidency than during the preceding period. Secondly, the reports on DPRK from two periods have shown difference in several areas from news topics to the patterns of source usage.

In general, North Korean nuclear issue appeared the ‘hottest issue’, but there was substantial coverage of themes like South-North talks, internal affairs, human rights, missile launches and military operations, economic problems and the

Six-party talks. If we compare two presidential periods, the topics as North-South peace talks and North-South commercial partnership were mentioned more often during the Roh's presidency. However, during the Lee's presidency articles on missile launches and military operations, DPRK's economic problems and internal affairs are more widespread. In the area of policy advises, the neutral variants (for example, new plan or agreement between other parties) are dominant. However, from 2003 to 2007 we may see higher percentage of the articles suggesting collaborative approach toward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from 2008 to 2012, news agencies expressed higher demand to strengthen the ROK's national security system. As for the news sources, "Joongang Ilbo" and "Seoul Sinmun" have also shown difference depending on presidential period. However, the most frequently used sources, regardless of the administration, were South Korean officials, professors or research institutes; North Korean officials appeared as the rarest information source. From 2003 to 2007, "Seoul Sinmun" relied more on the defectors' testimonies and gossips, whereas "Joongang Ilbo" tended to rely more on the DPRK's news agencies. However, from 2008 to 2012, general usage of the DPRK's news reports as source. Along with that, the usage of anonymous 'information channels' has also increased.

The basic image of the DPRK has not changed. In general, North Korean image is constructed by frames as 'opponent', 'military threat', 'dictatorship' and 'unpredictable country'. In other words,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is a country which is hard to deal with, remaining in self-isolation and ruining all the cooperation efforts. The positive frames, such as 'partner', appeared mostly in

2003~2007 and this can be explained by higher hopes about cooperation which was triggered by the South-North peace talks.

However, after the 2008, there was higher percentage of frames ‘dictatorial state’, ‘the subject of reform and opening’, ‘underdeveloped country’ and ‘military threat’. At that tim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as heavily criticized for prioritizing military development over citizens’ rights and welfare under the label of *songun* (‘military-first’) policy. Moreover, during the 2003-2007 period, news agencies used to blame ROK’s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DPRK, if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However, after the 2008 events like cancellation of a conferences or suspension of collaborative projects were presented mostly as the DPRK’s fault.

Keywords: framing, image, content analysis, North Korea, news

Student number: 2015-25125

